

中 겨냥했지만... 바이든 ‘기술패권’ 韓도 사정권

美 2500兆 슈퍼부양책 발표

중굴기 맞서 ‘제조 허브’ 도약 의지
제조업·R&D 사상 최대자금 투입
韓 반도체 규제 예고 “대응 나서야”



으로 나선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을 위한 반도체 법안(CHIPS for America Act)’에 따라 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연구 및 생산 투자금을

의회에 요청했다.

민간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 주도권 확보에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 인텔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진출을 선언했고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웨스턴디지털이 일본 키옥시아를 인수하려 서로 경쟁하는 것도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미국 정부와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이어 미국의 한국 견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가 작년 16개에서 14개로 줄고 순위도 대체로 떨어졌다”며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해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반덤핑 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가 악화한 상황에서 기업은 미국 내 법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 대응하고, 정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해서 상무부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튜 굿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한미 정상이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역과 기술 분야 협력”이라며 한미동맹 확대를 강조했다.

김서영 기자 sjung2@ 권태성 기자 tskwon@



고령자 화이자 백신 접종

정부는 1일 전국 예방접종센터 46곳에서 만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서울 송파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접종에 앞서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 관련기사 6면 사진공동취재단

“줄속정책에 멍든 원도심·신도시 도시정비·택지개발 쌍끌이 가야”

신도시 개발 정책 한계 <골>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조성하려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두고 ‘줄속 도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기존 주택 시장과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서울과 근교에도 재건축·재개발해야 할 노후 주택이 늘고 있는데 신규 택지 공급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신규 택지 개발과 기존 도심 정비에 유기적으로 맞물려 진행돼야 집값도 잡고 주거 여건도 개선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당시만 해도 주택 경기가 하강하면서 더 이상 대형 택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대형 택지 공급 중단을 선언했다. 택촉법 폐지는 정치적 사정으로 불발됐지만, 이 같은 기조 탓에 박근혜 정부 들어 신규 지정

한 공공택지지구 면적은 연평균 138만㎡로, 직전 이명박 정부(연평균 1440만㎡)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당시 관가와 학계에선 택촉법 폐지를 전제로 공급 대안을 마련하는데 분주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2014년 수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택지 전문가들은 택촉법 폐지로 민간 주도 재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 외에는 택촉법에 의존한 대형 택지 조성을 대체할 주택 공급 방안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가 융적률이나 재건축 부담금 등 민간 주택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도 이런 사정에서다.

박근혜 정부 퇴진 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여권은 반대 기조였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주변에서 비롯한 집값 상승을 경계했다. 지난 정권에서 완화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원상 복구했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자 집권 1년 만에 3기 신도시(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 건설을 선언했다. 올해도 경기 광명·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가해 집값 잡기에 나섰다.

문제는 전·현 정부 간 주택 공급 방법론이 양극단으로 갈리면서 주택 공급에 단절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택지 공급에 소극적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그 대안인 민간 정비사업을 백안시한다. 여기서 주택 정책 스텝이 꼬였다. 3기 신도시 건설로 부족한 주택을 채운다곤 하지만 일러야 2024년에 첫 입주 아파트가 나온다.

3기 신도시에 치중하는 동안 남아가는 도심 주택도 문제다. 준공 후 30년이 넘는 노후주택은 서울에서만 55만 가구(2019년 기준)에 이른다. 서울 주택 다섯 채 중 한 채꼴(18.6%)이다. 경기도에서도 1990년대 초반에 지은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올해부터 줄줄이 입주 30년 차에 들어간다. > 3면에 계속 박종화 기자 pbell@

克日 “해냈다” 韓 소부장 기술독립 결실

SK실트론 등 5곳 글로벌 M&A로 100대 핵심기술 확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인수·합병(M&A)을 통해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 확보에 성공했다.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단행된 2018년 7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거둔 결실로 소부장 기술 독립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원준, SK실트론, DL(옛 대림산업), CJ제일제당, SK종합화학 등 5개 기업이 해외 M&A를 통해 차량용 반도체 등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소부장 외국법인 M&A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며, 최근 산업부로부터 피인수 기업의 생산 품목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임을 확인받았다.

‘소부장 외국법인 M&A 세액공제’는 정부가 정한 핵심전략기술 품목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외국 기업을 국내 기업이 지분 50% 이상 또는 사업 인수할 경우 인수가액(5000억 원 한도)의 5~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5개 기업은 법인세 신고 시 최초로 세

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들 기업이 M&A를 통해 확보한 소부장 기술은 미국·일본·독일 등 소수 기술선진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독과점하고 있는 기술이다.

원준은 작년 1월 독일 아이젠만의 탄소 섬유 열처리 장비 사업부를 인수했다. 이를 통해 열처리 분야 선진 기술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을 수행할 인력도 확보했다. SK실트론은 미국 듀폰의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부를 인수해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DL은 미국 크레이튼의 고기능성 고무 사업부를 인수해 고기능 탄성 소재 및 부품 생산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CJ제일제당은 효소 생산 전문기업인 중국 유펄 지분을 인수해 글로벌 효소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했다. SK종합화학은 프랑스 아르케마 고기능성 접착제 사업부를 사들여 그간 100% 수입에 의존하던 기능성 접착수지의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HAAH ‘침묵’ 쌍용차 ‘법정관리’ 위기

美 유력 투자자 LOI 제출시한 넘겨

쌍용자동차의 경영 정상화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유력 투자자인 미국 HAAH 오토모티브가 예정된 시한까지 투자意向서(LOI)를 보내지 않으면서다. 이제 쌍용차의 앞날은 법원이 결정지를 전망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AAH는 이날 오후까지도 쌍용차에 투자意向서를 보내지 않았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에 HAAH의 투자意向서를 보정명령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쌍용차는 HAAH의 투자意向서가 한국 시간으로 이날 새벽에 전달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를 전달받지 못하며 쌍용차는 보정서만을 법원에 제출했다.

HAAH가 침묵을 유지하면서 쌍용차의 P플랜(단기법정관리) 돌입도 불투명해졌다. P플랜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을 전제로 3개월 정도의 단기 법정관리를 거쳐 법원 주도로 신속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쌍용차가 투자意向서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법원이 당장 회생 개시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이미 석달 가까이 회생 개시 결정을 미룬 상태라 쌍용차의 P플랜 돌입을 마냥 기다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쌍용차의 자본잠식률은 111.8%다. 한국거래소는 13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쌍용차의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한편 쌍용차는 전날 평택공장 등 165개 토지 자산(장부가액 4025억 원)을 재평가받기로 하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티맵+우버' '카카오+구글' 판 커지는 택시 모빌리티

티맵-우버 합작사 '우티' 출범 점유율 80% 카카오에 도전장 카카오, 구글서 565억 유치 "투자 넘어 비즈니스 협력할 것"

카카오모빌리티가 장악한 택시 호출 시장에 티맵모빌리티와 우버의 합작법인인 '우티'가 도전장을 던졌다.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모빌리티 사업에 베딩 경쟁을 벌이면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1일 SK텔레콤(SKT)의 자회사인 티맵모빌리티와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합작법인인 '우티'가 공식 출범했다. 우티의 최대 경쟁자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구글로부터 565억 원을 투자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택시 호출 서비스를 하는 티맵 택시는 현재 시장 2위이지만, 1위인 카카오T의 시장 점유율이 80%로 양자 간 격차는 상당하다. 티맵모빌리티는 이 같은 호출 서비스 시장에서 가맹택시 사업을 하는 우버와 힘을 합쳐 카카오모빌리티의 아성을 무너뜨리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우버는 조인트벤처에 1억 달러(약 1150억 원)

를 투자했다.

우티는 티맵택시를 기반으로 우버의 가맹택시까지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가맹택시는 가맹 업체가 택시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으로 카카오T블루, 타다라이트, 우버택시, 마카롱택시 등이 대표적인 업체다. 우버택시는 올해 1월 서울에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1200여 대의 가맹택시를 확보했다. 우티의 구체적인 서비스는 올해 중순께 공개될 예정이다. 티맵택시와 우버 택시를 통합한 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우티가 모빌리티 전쟁에 공식 데뷔한 이날 카카오모빌리티는 구글로부터 5000만 달러를 유치했다고 공식했다. 이번 투자로 구글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분 1.7%를 확보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구글은 단순 투자를 넘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용자 경험 강화를 위한 서비스 혁신, 시장 성장에 기여할 신규 비즈니스 발굴을 우선 과제로 협력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회성 협력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번 투자 유치는 우

티의 가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국 택시 기사 수가 25만~26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카카오T에 등록된 기사 수는 23만, 티맵택시 등록 기사 수는 20만 명가량이다. 기사 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용자 수는 카카오T가 월평균 1000만, 티맵택시가 75만 명으로 격차가 크다. 우티의 과제는 이 같은 차이를 좁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티가 향후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로 카카오T의 이용자를 흡수할지 주목된다. 글로벌 1위라는 우버의 브랜드와 국내 내비게이션 1위인 티맵 간 시너지가 어떤 결과물로 도출될지도 주목할 요소다.

택시 호출 사업을 떼어낸 티맵모빌리티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첫 번째로 선보일 예정이다.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서비스 출시 시기에 관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티맵모빌리티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 417억 원, 당기순손실 18억5000만 원을 냈다. 기업가치는 1조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2025년까지 연 매출액 6000억 원, 기업가치 4조5000억 원으로 키우는 게 목표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데이터	음성	문자	알뜰폰 요금 (부가세 포함)	유사 이동사 요금
1.5GB	50분	50건	4,950원	미제공
3.5GB	120분	120건	9,900원	미제공
5GB	300분	100건	15,000원	45,000원
7.5GB	120분	120건	22,000원	미제공
9GB	400분	150건	28,443원	55,000원
12GB	300분	100건	31,500~36,500원	* 온라인무약정 37,000원
30GB	300분	100건	39,000~44,000원	미제공

※4~5월 출시
□ 알뜰폰 독자 요금제로, 각 알뜰폰 사업자마다 출시 요금제 계획
※출처: 과기정통부

알뜰폰 5G 요금제 '4950원'

1.5~30GB 상품 다양... 이동사 5G 도매대가 인하

월 이용료가 5000원 미만인 5G (5세대) 알뜰폰 요금제가 나온다. 중저가 5G 자급폰에 중저가 5G 알뜰폰이 결합하면 이용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시장에서도 알뜰폰 사업자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4~5월부터 알뜰폰 사업자들 (10개)이 독자적으로 4만 원대 30GB, 3만 원대 12GB 이하 중·소량 구간의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한다. 다만 이동사 계열사는 중소사업자 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3~4개월 늦춰 7월부터 해당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세종텔레콤이 1.5GB 데이터와 음성 50분, 문자 50건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4950원에 내놓는다. 3.5GB(음성 120분·문자 120건)는 9900원이다. 또 국민은행은 30GB(음성 300분·문자 100건) 요금제를 4만4000원에 출시한다. 최대 할인 시 3만9000원이다.

이동사 5G 요금제의 도매제공 확대 및 도매대가도 인하한다. 이동사의 12~150GB 구간 요금제 상품을 알뜰폰에 2분기 이내에 신규(110GB+5Mbps,

150GB+5Mbps) 도매 제공한다. 도매 대가는 63% 이하로 설정해 이동사보다 30%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국민카드와 제휴해 출시한 '알뜰폰 전용할인카드'의 할인 혜택을 확대했고, 롯데카드 등에서도 알뜰폰 전용할인 카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할 알뜰폰 5G 요금제와 전용할인 카드는 알뜰폰 종합포털인 '알뜰폰허브'(알뜰폰.kr)에 반영해 알뜰폰 이용자가 5G 맞춤형 요금제를 비교 검색하고 가입하면서 제휴카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LG유플러스의 씨제이헬로(현 LG헬로비전) 인수 인가 시 부과한 '알뜰폰 활성화' 조건 갱신을 통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지원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 요금제를 구성할 때 데이터 일정량을 미리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할인하는 데이터 선구매제 적용구간을 세분화해,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중소사업자나 데이터 전용사물인터넷(IoT) 사업자도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조남호 기자 spdran@

3월 수출 첫 500억 달러 돌파

증가율 2년5개월 만에 최고

우리 수출이 올해 처음 5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증가율도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수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16.6% 증가한 538억 3000만 달러, 수입은 18.8% 증가한 496억 5000만 달러를 각각 잠정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무역수지는 41억 7000만 달러 11개월 연속 흑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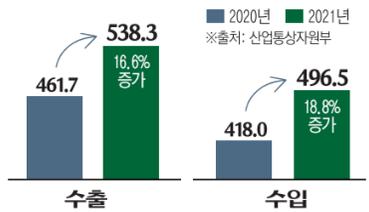
수출액은 역대 월 수출액 중 3위이자 역대 3월 수출액 중 1위다. 수출 5개월 연속 증가는 3년 만이며, 수출 증가율은 2년 5

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5대 주요 품목 중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14개 품목이 증가하는 등 고르게 선전했고 선박(63.9%), 석유화학(48.5%), 바이오헬스(43.6%) 등 9개 품목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9개월, 자동차는 3개월, 바이오헬스는 19개월 연속 증가했다. 시스템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등 6개 신성장 품목도 7개월 이상 연속 플러스 행진이다. 석유제품(18.3%), 섬유(9.4%), 일반기계(6.9%) 등 코로나 19 이후 부진했던 중간재도 반등했다.

지역별로는 대(對) 아세안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하며 중국(26%), 미국

3월 수출입 실적 (단위: 억달러) ※통관기준, 잠정치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9.2%), 유럽연합(36.6%), 아세안(10.8%) 등 4대 시장에 대한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아울러 3월 교역액은 103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3월 수입액 중 우리 기업의 생산·투자·수출 활동과 직접 관련된 자본재의 수입이 25.7%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장애라는 무거운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행복한 일터, 편견과 차별을 버리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장애인고용 30년, 함께 하는 도약 1990-2020

☎ 1588-1519 www.kead.or.kr

전문가 “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 벗어나야” 한목소리

〈글 쓰는 순서〉

1. 신도시 개발 이대로 좋은가
2. '눈먼 돈' 토지 보상금
3. '도심 정비-택지 개발' 선순환 고리 만들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팽부기 논란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신도시 조성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LH 주도의 하향식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공택지 조성 사업의 공공성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집값을 잡기 위한 카드로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는 신도시 건설에 참여했던 전직 관료들도 고개를 저었다. 수도권 2기 신도시 건설 당시 실무를 이끌었던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은 “과거엔 대규모 택지 공급이 시장 가격을 내릴 수 있었지만, 이젠 같이 오르는 처지”라며 “2기 신도시를 끝으로 신도시 건설을 멈춰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도시 건설, 집값 잡기엔 역부족 LH가 개발권 독점하며 문제 발생 공공주택 제외하고 시장에 맡겨야

“주민들과 충분한 시간 갖고 협의 사업 공공성 더 강화해야” 의견도

국토교통부 전신기관에서 도시 개발 정책을 오래 맡았던 전직 고위 관료는 “도심 주택 수요를 공급이 못 쫓아가면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정 전 차관은 LH가 쥐고 있는 개발권을 민간에 넘길 것을 조언했다. 그는 “LH가 전국 택지 개발과 도시 개발을 도맡아 하다 보니 정보 독점이 생겼다”며 “제도적으로 투기 위험이 잉태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양주택 건설을 왜 공공에서 해야 하

신도시 개발, 어떻게 전환해야 할까



“스스로 주거 환경이 어려운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택을 공급해야”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



“장기적인 수급 계획과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택지 공급”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서울의 주택 수요가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건 여전히 유효”

전직 국토교통부 고위관료

“처음부터 끝까지 주거 약자에게 공공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집중”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나. LH는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임대주택 관리만 해도 버거운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제외하곤 나머지 영역은 민간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가 내놓은 진단과 해법도 비슷하다. 서 교수는 “장기적인 수급(주택 수요와 공급) 계획에 따라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택지를 조성해야 했는데 갑자기 신도시를 공급하다 보니 사달이 났다. 여기에 LH가 정보를 독점하면서 문제를 키웠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과 협의해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신규 택지 개발을 지양하고 도심 재개발 및 콤팩트시티(건물을 높게 올려 주거·상업 등 도시 주요 기능을 집약하는 도시 개발 방식) 건설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민사회에선 신도시를 개발하더라도 지금보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도시 내 공공택지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면서 주거 안정이란 취지와 달리 비싼 값에 분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일각에선 택지가 토지주에서 LH와 건설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과다하게 집행된다고도 지적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사업자에 수용권을 주는 것인데, 토지 사용 후엔 공공성이 점점 약해진다. 공공택지 사업의 최종 목적이 땅을 파는 것처럼 변질됐다”며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의사 결정 구조를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LH가 신도시 안에서 책임지고 공공주택을 공급되되 LH 자원만으로 어렵다면 연기금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공적자금으로 보조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3기 신도시 탈세혐의 165명 세무조사

예정지 발표 전 5년간 거래 조사 국제청 “자금 흐름 끝까지 추적”

#별다른 소득이 없는 30대 A 씨와 B 씨는 제조업을 운영해 온 모친과 함께 개발 예정지역 토지를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농업은 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는 존재하는 농업회사법인 C는 농지를 양도 하면서 양도세를 감면받았고, 법인의 주식을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저가로 양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신도시 예정지에서 벌여졌던 불법 토지 거래와 탈세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개인과 법인, 기획부동산, 농업법인 등 165명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김태호 국제청 자산과세국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 등에 있는 31개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의 토지 거래를 분석했다”며 “총 165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도시 예정 지구 6곳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 시흥이다. 탈세 혐의를 받는 대상은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편법증여(증여

세 탈루) 혐의자 115명, 법인 자금 유출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0명,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하위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 거래를 중개하거나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13명 등이다.

국제청은 국제 부과제적기간 등을 고려해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발표 이전 5년간 거래를 조사했다. 이 때문에 가장 오래된 3기 신도시 발표는 2018년으로 분석 대상은 지역에 따라 2013년에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국제청이 추가로 분석하고 있는 개발지역 중에는 2017년에 발표된 곳도 있어 앞으로 세무조사에서는 최대 9년 전인 2012년 거래자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제청은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해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자금조달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특수관계인(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인척으로부터 조달된 자금도 의심될 경우 조사 범위에 포함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도시정비·택지개발 쌍끌이로

▶1면서 계속

전문가들은 신규 택지와 기존 도심 개발이 균형을 이루면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택지 개발과 도심 정비가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다. 어느 한쪽을 간과했다간 지난 5년처럼 ‘주택 공급 절벽’에 시달릴 위험성이 커진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도심 정비사업은 직주 근접성이나 공간 활용도 면에서 효율적이지만, 토지 가격이 비싸고 이해관계 조율에 장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다. 반면 공공택지 개발은 공공이 수용권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잉 공급 우려와 공공기관 부패라는 잠재적 위험성도 안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A 씨는 “도심 주택 수요는 늘 발생한다.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서울 주택 수요가 빠지지 않는다면 서울 외곽에 신규 택지를 건설할 필요성은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형 택지에 대한 장기적 관리 방안도 필요하다. 대형 택지는 수용 인구가 많은 만큼 공동화 위험성도 크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에선 자칫 인구감소로 슬럼화 위기를 겪고 있는 일부 신도시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3의 길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인구 등을 고려한 적절한 주택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며 “서울에 산재된 국·공유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지금 같은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스마트 농기계

원격조종하는 자율주행농기계로 노동력, 비용은 절감, 생산성은 증대

스마트 팜

농업 빅데이터로 농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ICT기술로 무인 농장 운영

스마트 모빌리티

이동, 운송, 작업을 위한 신개념 모빌리티 솔루션

새 이름 **대동**으로 미래농업을 시작합니다

74년 국내 1위 농기계 기업 '대동공업'이 새로운 사명 '대동'으로 미래농업을 선도합니다

농기계에서 미래농업으로

www.daedong.co.kr

“필요한 모든 제품 美서 얻을 것” 세계의 공장 선언

바이든 인프라부양책 (단위: 달러)

주요항목(투자액)	세부항목	예산액
교통 (6210억)	전기차 인센티브	1740억
	도로·교량	1150억
	대중교통	850억
	공항	250억
건설·유틸리티 (6890억)	도로안전	200억
	취득가능 주택	2130억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1000억
	공립학교	1000억
	상수도	660억
일자리·혁신 (5780억)	창정에너지	1000억
	국내제조업	520억
	국립과학재단(NSF)	500억
	반도체산업	500억
자택간호 (4000억)	연구개발(R&D)	300억
	기후기술	350억
	노인·장애인 지원 등	-

※ 출처: 뉴욕타임스(NY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가진 연설에서 2조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피츠버그/AP연합뉴스

바이든, 제조업 부흥 의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구축하겠다고 만천하에 선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약 2조3000억 달러(약 25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인프라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바이든이 이날 내놓은 부양책은 8년간 2조 달러가 웃도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도로와 교량, 공항 시설을 개선하고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교량, 도로 건설 등 인프라 투자에 6210억 달러 △노인, 장애인 등 지원에 4000억 달러 △식수 공급 관련 상수도 인프라와 광대역 인터넷망 및 전력망 개선 등에 3000억 달러 △학교 건설과 개선, 신규주택 건설과 개조 등에 3000억 달러 △미국 제조 및 연구·개발(R&D), 직업훈련 지원 등에 5800억 달러를 각각 투입한다.

제조업 부흥을 표명한 바이든의 새 구상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은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려는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 근로자와 미국산 제품을 우선하지 않는 기업과는 절대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제품을 미국에서 얻을 것”이라고 목

8년간 2.3조 달러 투입... 반도체·전기차 등 미래 산업 사활 삼성·현대차 등 한국기업 미국 내 생산 확대 압박 거세질 듯

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미만인 R&D 지출도 2%로 높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새 인프라 계획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 향후 미래 산업 핵심이 될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나타냈다. 인프라 계획에는 미국 반도체 산업을 위한 500억 달러의 이니셔티브가 포함됐다.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를 설립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R&D와 칩 설계를 지원한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과 반도체 품귀 현상 속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첨단 제품 생산을 위한 광범위한 공급망 검토를 정부에 지시한 상태다. 여기에 ‘반도체 굴기’를 추구하는 중국이 첨단 칩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선두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전폭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은 초당파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한때 미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국이였다. 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제조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1990년의 37%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는 12%로 명성이 퇴색한 지 오래다. 반도체 강국 지위는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이 누리고 있다. 이에 인텔 등 미국 업체는

반도체 왕관을 탈환하겠다는 바이든의 이니셔티브에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다.

자동차 업계의 화두가 된 전기차 부문에서도 바이든은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었다. 1740억 달러 예산을 책정, 부품 조달부터 생산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 전기차는 여전히 틈새시장 제품이 그치고 있다. 신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도로상의 모든 자동차에서는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기차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조류다.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 속에 폭스바겐과 제너럴모터스(GM) 등 전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들이 늦어도 2030년대 중반까지는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런 흐름을 놓치면 미국 자동차 산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이 2030년까지 총전소 50만 개를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에서 전기차와 배터리를 생산하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안도 공개했다.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올리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다만 새 인프라 계획은 의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은 야당인 공화당과 기업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 확실시된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美 반덤핑 강화... 수입규제 기조 유지”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반덤핑 신규조사 5년 새 3배 ↑ 관세율 높이는 관행도 고착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며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 규범 중심의 다자주의적 접근이 기대됐지만, 반덤핑 조치로 대표되는 미국의 수입규제 기조는 지속하거나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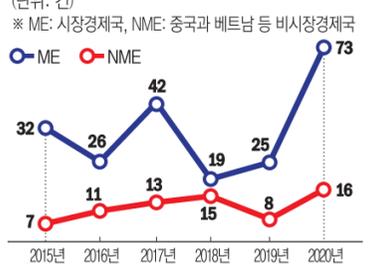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일 발표한 보고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규제 정책 전망: 반덤핑 조사 관행 현황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과거 미국의 반덤핑 신규조사는 연평균 20~30건 안팎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총 89건에 달했다. 또한, 반덤핑 관세율을 높이는 미국 조사 당국의 기법과 관행이 고착화하는 조짐도 보인다.

반덤핑은 특정 수출국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며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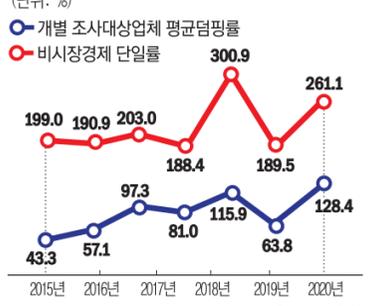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조사 당국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반덤핑 절차법이 개정된 뒤 실제로 ‘불리한 가용정보’(AFA), ‘특별시장 상황’(PMS) 등의 문체적 기법들이 빈번히 사용됐고, 반덤핑 관세율도 이전보다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AFA 규정은 조사대상업체가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상무부가 적용 가능한 반덤핑 조사에서 선정된 어떤 덤핑마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기법이다. AFA를 적용 받은 업체 수는 2016년 이전 연평균 5개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31개로 늘었다.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 전체를 부인하고 최고율의 덤핑마진을 사용하는

연도별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평균덤핑률



토털 AFA(Total AFA) 적용으로 평균 덤핑마진율은 2008년~2015년간 64.8%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113.3%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PMS는 수출국에 특별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상무부가 구성가격 산정 시 어떤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치다.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중국·베트남 등 비시장경제 국가의 경우 미국은 모든 수출자를 정부 통제하에 있는 단일체로 간주하고 같은 덤핑률을 적용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서 비시장경제 단일률(NME-wide rate)은 2016년까지 200%를 밑돌다가 2017년 평균 203%, 이후 2019년에는 최고 300.9%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창욱 기자 woogi@



양향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손경식 회장, 이경목 서울대 교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총 주최 ‘심화되는 반기업 정서, 진단과 해법’ 심포지엄에서 손병락 전경원 자유와창의교육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韓·美 무역·기술 협력이 최우선 의제”

전경련·美 CSIS 웨비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과 기술 분야 협력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일 오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 외교·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웨비나를 개최했다.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관찰이 한국으로서 대비의 시작이라고 볼 때 현재 미국 언론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패러다임 전환자로 평가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총장은 “우리 관심사인 북한 핵 문제, 미·중 관계, 통상정책 등에 있어 바이든의 국내외적 패러다임 변화를 주시해야 한

다”고 말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 한미동맹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전 앞에서 단합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동맹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 분야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바이든 정부의 동맹과 규범 중심 정책이 구체화돼 양국의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CSIS는 이날 자체적으로 마련한 한미 동맹 권고안을 소개하면서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이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우주, 보건, 기후변화, 에너지, 인공지능(AI)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대영 기자 kdy@

韓 기업 10곳 ‘포춘 글로벌 500’서 순위 밀렸다

19위 삼성, 애플과 격차 커져 SK하이닉스·LG화학은 탈락 글로벌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2020 포춘 글로벌 500(Fortune Global 500)’에 이름을 올린 한국 기업들 14곳 중 10곳의 순위가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포춘 글로벌 500’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발표하는 명단으로, 매년 전 세계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글로벌 500대 기업이 선정, 발표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2020 Fortune Global 500(포춘 글로벌 500)’을 바탕으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글로벌 기업 수, 매출액, 매출비중 지표를 분석한 결

과 한국 기업 수는 총 14개사로 2019년 16개사보다 2개사가 줄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2019년 119개사에서 2020년 124개사로 5개사 늘었고, 일본은 52개사에서 53개사로 1개사 증가했다. 미국은 모두 121개사로 같았다.

특히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 기업들은 2019년 9094억2000만 달러(약 1027조 원)에서 2020년 8004억1000만 달러로 12% 감소했다.

한국 기업과 달리 미국은 2019년 9조 4024억8000만 달러에서 2020년 9조 8063억 달러로 4.3% 증가했고, 중국도 7조9149억1000만 달러에서 8조2949억3000만 달러로 4.8% 늘었다. 일본은 3조1291억3000만 달러에서 3조1241억3000만 달러로 0.2% 감소하는 데 그쳤다.

국내 기업들 각각의 순위도 대체로

내려앉았다. 2020년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 14개사 중 10곳이 전년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2019년 15위→2020년 19위) △SK(73위→97위) △포스코(171위→194위) △LG전자(185위→207위) △한국전력(193위→227위) 등이다. △SK하이닉스(2019년 335위) △LG화학(2019년 490위)은 순위에서 빠졌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2016년 경쟁사 애플에 순위가 역전된 이후 2020년 현재 순위 격차가 7단계(애플 12위, 삼성전자 19위)까지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순위가 상승한 기업은 4개사로 △현대차(94위→84위) △현대모비스(393위→385위) △KB금융(434위→426위) △CJ(463위→437위) 등이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환율·물가·금리 악재에 外人 올들어 8.6조 '셀 코리아'

달러 강세에 물가 상승 우려 겹쳐 안전자산으로 이동
낮은 백신 접종률 → 경제회복 지연 '외인이탈' 부채질

“외국인이 정말 떠난 것은 아닌지 좀 불안하네요.” 최근 주식투자 관련 커뮤니티와 온라인 채팅방에서는 외국인투자자들의 향후 움직임을 묻는 글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증시 주변 분위기와 상관없이 외국인은 ‘팔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을 받아내며 떠받치고 있지만,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증시의 추세적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미지근한 글로벌 경기와 물가 상승 압력도 외국인의 발길을 밖으로 돌린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치가 낮아진 신흥국 통화보다는 안전 자산인 미국 달러화를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신흥국 주식 시장에서 외국계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하기 쉽다.

◇외국인 올해 들어 8조 넘게 처분 = 지난달 10일 2950대로 내려앉았던 코스피는 1일 3087.40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미국의 잇따른 경기 부양책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날 증시 반응은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많다. 저가 매수를 노린 개인들이 많지만, 추세적인 외국인투자자들의 ‘셀(sell) 코리아’ 현상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들어 3월까지 8조5964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다만 1월 -5조2996억 원, 2월 -2조562억 원, 3월 -1조2405억

원 등으로 매도 강도는 약해졌다. 외국인이 1월 이후 가장 많이 내다 판 종목은 국내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로 각각 6조4210억 원, 2조5510억 원어치를 내다 판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1조4320억 원), 기아차(1조2810억 원), 현대모비스(1조2180억 원) 등도 1조원 넘게 팔았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추지 않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상황을 거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어서 향후 실물 경제로 이어지는 타격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감도 작용한다.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일단 현금을 쥐고 사태를 관망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인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은 이미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형성 중”이라며 달러 강세가 신흥국 수급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걱정이다. 경기가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만 급등하면 통화 가치가 지나치게 하락(환율 상승)하기 쉬워, 해당 국가에서 자금이 대거 유출될 수 있다.

주식시장에 2차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외국인 수급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각국의 경기 부양책은 ‘소비 증가→기업 실적 호조→글로벌 경기 회복’이라는 선

올해 외국인 순매도 상위 10개 종목 (단위: 억 원, 1월 4일~3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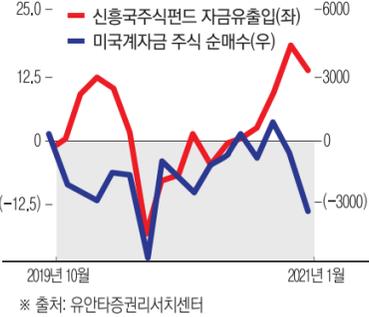


출처: 한국거래소

순환 고리를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한다. 시장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전반적인 위험자산 비율을 줄이는 리밸런싱이 이뤄지다 보니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인 매도세는 통화, 美 금리가 관건 = 외국인의 국내 주식 ‘팔자’는 국내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산 비중 조절 과정으로 해석된다. 기관투자자는 특정 자산 비중이 늘어나면 자산 배분을 재조정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매도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며 주식

신흥국 주식펀드와 미국계 자금 유출입 (10억 달러)



출처: 유안타증권리서치센터

순자산 규모가 늘어나자 외국 연기금 계정에서 이를 정리한 셈이다.

특히 달러 강세로 인한 미국계 자금 유출이 컸다. 2020~2021년에 외국인 중국 내 주식을 가장 많이 매도한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16조350억 원을 순매도했고, 올해 1~2월에는 4조8090억 원어치 주식을 정리했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외국인 수급 환경은 탄탄한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 달러 강세 속도 조절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한국의 주요국 대비 실

적 모멘텀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지수 기준 한국 증시의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은 연초 대비 9.1%다. 이익 개선 속도는 신흥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기관들의 주식 자산 비중 조절은 상당 부분 끝난 것으로 본다”면서 “글로벌 연기금의 자산배분 조정으로 인한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미국 국제금리 10년물이 1.7%를 넘었고, 달러 강세를 지속하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낮은 백신 접종률에 따른 경제 정상화 지연도 걸림돌로 꼽힌다. 이상민 카카오페이증권 연구원은 “한국과 같은 신흥국 시장은 백신 접종 일정이 늦어져 회복 국면이 미국보다 지체되고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0%인 것과 비교하면, 미국의 성장세가 월등히 높아 현실적으로 외국인 수급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인아 기자 jih@

지난달 거래대금 5개월 만에 최저

증시 베타목 동학개미 코인행
투자자 예탁금 올 11조 줄어

지난해 카카오투 주식투자를 시작한 30대 직장인 박 모 씨. 코스피가 3000선에서 초에 갇혀 있자, 박 씨는 최근 가상 화폐 계좌를 열었다. 그는 “아직 손해를 보는 수준은 아니는데, 미국 주식이란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지인들은 제법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면서 “마음이 콩밭(더 좋은 투자처)에 가 있다 보니 국내 주식은 잘 들여다 보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박 씨와 같은 투자자가 늘면서, 코스피 하루평균 거래 대금이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거래대금 감소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가볍지 않다고 걱정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한 달 개인투자자의 하루평균 거래 대금은 19조 1403억 원으로 지난 1월(30조9645억 원)보다 38% 감소했다. 지난 2월(23조 8330억 원)보다도 적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리는 주식 투자 열풍 속에 주식 투자자 수가 많이 늘었다. 지난해 개인 주식 투자자 수는 910만 7228명으로 2019년(611만6481명) 대비 299만 명가량 늘었다. 올해 초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예·적금에 들어 있던 돈을 끌어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은행·증권사 등에서 돈을 빌려 ‘빚 투(빚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

하지만 급등하던 주가가 주춤해지자 사람들이 지난 1월만큼 주식 거래를 많이 하

지 않고 있다. 증시 대기 자금 성격인 ‘투자자예탁금’도 지난 1월 12일에는 74조 5000억 원까지 늘었지만, 지난 30일에는 63조5371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3월 전체 거래대금도 하루평균 26조 1574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10월(21조311억 원)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가 팽리를 시작한 지난해 12월의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33조6369억 원,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는 1월에는 42조964억 원까지 치솟았다. 2월에도 32조 3692억 원을 기록한 일평균 거래대금은 3월 완전한 내림세를 보인다. 1월과 비교하면 37.86%, 2월에 비하면 19.19%나 감소했다.

개미들이 발을 빼자 지수도 옆길은 중이다. 코스피 지수만 하더라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 동안에는 14.85%가 올랐지만 이후 2월과 3월 두 달 동안은 2.86%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미국 국제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 5월부터 재개되는 공매도 등이 복합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부 투자자들은 최근 치솟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증시 자금이 분산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3월 들어 하루평균 거래대금이 크게 줄었는데 그중에서 개인 거래가 줄어든 것이 특징적”이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CFD(차액결제 거래)에 대한 과세, 5월 3일부터 시작되는 공매도 재개는 또 한 번의 수급환경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당신의 평범한 오늘을 지킵니다



민·관, 高집적·高性能 ‘차세대 전력 반도체’ 집중 육성

전력효율·내구성 뛰어난 디지털·그린뉴딜 핵심부품 개발
2025년까지 5개 이상 상용화...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지원

혁신성장 BIG3 추진전략

민·관이 실리콘(Si) 대비 전력 효율, 내구성이 뛰어난 3대 신소재 반도체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제7차 혁신성장 BIG3(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개발 및 생산역량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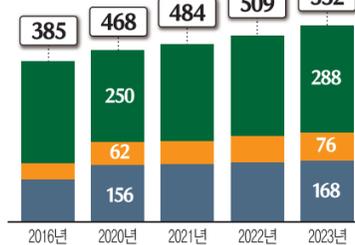
차세대 전력 반도체란 실리콘 대비 전력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난 실리콘카바이드(SiC), 질화갈륨(GaN), 갈륨옥사이드(Ga2O3) 등 3대 신소재 웨이퍼로 제작된 전력 반도체로서 AI, 5G 등의 디지털 뉴딜과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그린 뉴딜의 핵심 부품이다.

정부는 국내 차세대 전력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상용화 제품 개발, 기반기술 강화, 미래 제조공정 확보 등을 본격 지원한다. 2025년까지 수요연계 R&D를 통해 차세대 전력 반도체 상용화 제품을 5개 이상 개발하고, 양산 가능한 6~8인치 파운드리 인프라를 국내에 구축한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상용화 제품 개발을 위해 수요연계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력반도체 시장 규모 및 주요기업

(단위 : 억 달러) ■ 소자 ■ 모듈 ■ 파워IC □ 합계
※ 2021년, 2022년, 2023년은 추정치
※ 출처: OMDIA



단기에 상용화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소자-모듈-시스템이 연계된 R&D 과제를 기획해 상용화를 촉진하고, 수요·공급 연계 온라인 플랫폼과 융합얼라이언스 등을 활용해 상용화 성과를 확대한다.

국내 유일의 6인치 SiC 반도체 시제품 제작 인프라인 파워반도체 상용화 센터를 활용해 시제품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파운드리 인프라 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소재 응용 및 반도체 설계·검증 등 기반기술을 강화한다. 실리콘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iC, GaN, Ga2O3 등 화합물 기반 신소재 응용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기업의 소재·웨이퍼 기술 확보를 지원해 밸류체인을 견고화한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초청사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집적·고성능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을 위해 파워 IC 설계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설계와 제조를 연계하기 위한 공정 표준 설계 키트(PDK)도 개발해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 양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제조공정 확보를 지원한다. 아직 초기인 차세대 전력 반도체 제작 공정을 최적화·고도화해 시제품 제작·양산에 이르는 기술력

을 확보하고, 신뢰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장비를 부산 파워반도체 상용화 센터에 구축한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 관련 파운드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 파운드리와 6~8인치 기반의 양산 공정 구축 및 선형기술 확보를 적극적으로 협의·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친환경차 정비 인프라인력 확대를 위해 전기차 전문정비비소를 2025

년까지 3300개 확충하고, 자동차학과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수소차 검사소도 현재 10개소에서 내년 23개로 2배 이상 늘린다.

충전 중 화재, 배터리 대규모 리콜 등으로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 안전성 시험항목을 7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충돌 안전성 평가대상에 전기차 4종을 추가한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통계청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보고서’ 보니

빈곤 퇴치·성평등 ‘뒤쳐진 한국’

저소득 가구 10가구 중 1가구는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거의 꼴찌였다.

이 같은 결과는 1일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 보고서 2021’에서 발췌한 것이다.

유엔은 2015년 9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빈곤, 건강, 교

육, 성 평등, 불평등, 기후변화 등 17개 정책 목표(169개 세부목표)를 달성하기로 하고 매년 231개 유엔 SDGs 지표를 근거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가구는 전체의 3.5%로 집계됐다. 특히 소득 수준이 ‘하’로 분류된 저소득가구는 13.0%로 전체 가구 평균보다 3.7배 높았다. 식품 안정성 미 확보 가구는 관련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식생활에서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응답한 가구다.

또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13.9%로 차별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0%(2020년 4월 기준)로 OECD 37개국 중 35위에 그쳤다.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1990년 2.6%에서 2019년 12.2%까지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20.0%보다 7.8%포인트 낮았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2000년 0.4%에서 2019년 2.4%까지 증가했으나 2018년 기준 여전히 OECD 37개국 중 가장 낮았고 산업재해는 2018년 기준 근로자 10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가 5.09명으로 터키(7.52명), 멕시코(7.46명), 미국(5.24명)에 이어 높았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33개국 중 6번째로 많았다.

한편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로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남성(3.9%)과 여성(4.0%)의 실업률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917명(올해 1월 1일 0시 기준)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사회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1047명)에 버금가는 수치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SDGs는 전 세계가 직면한 빈곤, 불평등, 기후위기, 폭력 등과 관련한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집단 및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모든 국가와 이해당사자 그룹의 참여와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코로나 하루 확진 600명 코앞 ‘4차 유행’ 조짐

어제 551명 확진 이틀째 500명대 수도권·영남권 중심 집단감염 속출 AZ백신 43만2000회분 내일 도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도 조만간 600명을 넘어설 기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551명 증가한 10만363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은 537명이다.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신규 집단감염이 대거 발생했다. 의료기관, 교육기관, 종교시설, 일반 다중이용시설 등 유행도 다양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용도 저하와 외부활동·이동 증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겹치면서 코로나19 유행은 3차 유행 종료는커녕 4차 유행으로 향하고 있다. 권준욱 방대본 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브리핑에서 “최근의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양상을 보면 상당히 어두운 상황”이라며 “유럽을 중심으로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이른 방역조치 완화, 변이주 출현·확산 등으로 다시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도 올 들어 하루 300~400명대 신규 발생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오늘은 국내 발생 환자가 537명까지 늘었다”고 지적했다.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짐에 따라 방역당국은 자가진단키트 활용까지 논의 중이다.

한편, 방대본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도입되는 백신 물량이 추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3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43만2000회분, 6월 화이자 백신 29만7000회분이 도입될 예정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법인택시 기사 8만명 70만원씩 생계 지원금

고용부, 오늘부터 ‘3차 지원사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 1인당 70만 원씩 생계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이런 내용의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56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8만 명에게 1인당 70만 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1일 이전 입사해 2일까지 계속 근무한 택시기사다.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이번이 세 번째다. 1~2차 사업은 지원 대상 택시기사의 근속 요건이 3개월이었지만, 이번 사업은 2개월로 완화됐다.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택시 운전기사도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자체에 직접 신청서를 내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식품·주류제조업 ‘불법 파견’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는 1일 식품·주류제조업 사업장을 시작으로 업종별·지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해 ‘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정기감독을 통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및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전의 불법파견 감독 사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의 과다 등을 고려해 업종별 및 지역별로 감독 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다. 특히 이날 정기감독이 시작되는 식품·주류제조업은 여성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사용 비

중이 높은 업종으로, 지난해 프랜차이즈 업체에 매일 납품하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수사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적발한 사례 등을 참고해 올해에도 감독 대상에 포함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정기감독이 적발 건수 위주가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KT는 AI로 교통을 제어하는 C-ITS 서비스로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골든타임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도로로 도시를 바꾸다



구급요원 아저씨, 감사합니다!

KT-C-ITS의 긴급차량우선신호서비스는 빠른이동이 필수적인 긴급차량에 우선신호를 부여하여 원차이송시간을 줄여줍니다.
 제주도에서 구급차이송시간을 2분 32초 단축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며, 전국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1588-0114

“박원순 피해자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겠다”

인터뷰 박영선 서울시장 보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는 초조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1일부터 시작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선거’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20%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여서다.

1일 공개된 뉴시스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유권자 806명 대상 지난달 30~31일간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표본오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박 후보 지지율은 36%에 그쳐 57.5%의 오 후보에게 크게 밀렸다.

선거 직전까지도 득표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여권을 향한 대형 약재들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가 방아쇠가 돼 쏟아져 나오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그리고 이번 재보궐의 발생 원인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다.

이런 약재들에 대해 박 후보는 이날 이

반성의 마음으로 일상 회복에 최선을 LH사태 발생 공무원 투기 재발 방지 3단계 감시 체계로 특혜·비리 단죄 “공정·정의 살아있는 서울 만들 것”

투데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피하지 않고 해결 의지를 보였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한해선 LH보다도 치명적인 박 전 시장 사건에 관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전하고 용서받고 싶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피해여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싶다”는 제 입장, 변함없다”며 “다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은 피해자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꼭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반성하고 성찰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는 지난달 17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가운데 한 시민이 박 후보를 안아주고 있다. 뉴시스

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2차 가해를 토로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요구는 자신을 ‘피해호소인’이라 불러 논란을 일으킨 남인순 의원 등에 대한 처벌이다. 그는 “저를 피해호소인이라 명명했던 의원들이 직접 제게 사과하도록 박 후보께서 따끔하게 혼내줬으면 좋겠

다”고 했다.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피해자를 만날 의향이 있는지, 또 어떤 조치를 하거나 당에 건의할 게 있느냐’는 본지의 서면질문에 박 후보가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이라고 답변했다는 점에서 선거 이후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증이 읽힌다.

다만 박 후보는 박 전 시장의 시정(市政)에 대해서도 호평했다. 그는 “보궐선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망하신 시민들에게 거듭 사과 드린다”면서도 “박 전 시장은 시민 중심 행정을 했던 복지행정·생활형 시장이었다. 서울의 장기플랜을 완수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약재인 LH사태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 구상을 밝혔다. 박 후보는 “공무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와 불법 투기, 특혜·비리는 단죄돼야 마땅하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유관기관-민간을 아우르는 3단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불공정과 단호하게 절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을 언급하며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의사결정을 통해 경제적 부당이득을 취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서울시에 이런 일이 다신 발도 못 붙이도록 가장 단호하고 확실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공정과 정의가 살아 있는 서울을 만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사전투표 독려 못 “4월 7일 국민 승리의 날로”

노원구 경춘선숲길 찾아 지지 호소 김종인·금태섭·나경원 동반 유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승리를 호소했다. 1일 현장 유세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도 함께하며 오 후보 지지를 독려했다.

오 후보는 1일 오후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을 찾아 사전투표 전 마지막 선거 유세를 시작했다. 시장 시절 조성한 경춘선숲길을 걸으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오 후보는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2번을 뺏아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과 청년 교통비 40% 감면 등 공약을 지적하며 “저급한 박 후보의 인식을 보면서 참으로 통탄스러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분노한다”며 “민주당의 인식 수준과 후보의 마음가짐에 대해 용서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 판단력을 이렇게 낮춰 보는 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반성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뺏속 깊이 반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이나마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사죄할 수 있도록 4월 7일을 대한민국 국민 승리의 날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오세훈(오른쪽)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경춘선 숲길에서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현장에는 김 위원장과 금태섭·나경원 전 의원이 함께했다. 특히 금 전 의원은 이날 첫 서울 유세에 함께하며 오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겉으로는 정의를 추구하고 공정을 추구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행위를 벌이는 것이 현 정부의 실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오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이 정부의 지난 4년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면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라는 것을 간절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문 정부에 회초리를 때려야 한다”며 “그레아만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고 우리 사회의 원칙과 상식이 바로서고 우리 정치가 정상적인 모습이 된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이 정권은 안보에 무능했고 경제에 무능했다”며 “무능보다 더 나쁜 건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일부터 이틀간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박준상 기자 jooon@

‘재보선 D-5’ 전문가 진단

오세훈 당선 가능성 2배 높지만 사이 진보 투표여부가 최대 변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4·7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수세에 몰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분을 살 만한 빅 이슈, 기권표 최소화 노력과 투표율 등으로 충분히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선거가 엿새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사이 판세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면서 “가장 큰 변수는 투표율로 역대 보궐선거 중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1년에 치러진 서울시장 재선거 투표율이 45.9%였다면, 이번 선거는

유일한 판단 기준인 여론조사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여론조사 평균 응답률이 4~5%로 높지 않다는 것은 하는 사람만 답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실제 2010년 6·2 지방선거 일주일 전 한국갤럽, 조선일보 여론조사(유권자 총 8115명 대상, 최대 허용 표본오차 ±4.4%포인트, 신뢰수준 95%)에 따르면 오세훈(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한명숙(민주당)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17.7%p에 달했지만, 정작 선거에서는 격차가 0.6%p에 불과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적으로 여론조사엔 응하지 않거나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이 진보층, 중도층에 따라 막판에 얼마든지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변수

국민 분노 유발 빅이슈 불거지면 뒤집기 가능 “여론조사 응답률 현저히 낮아” 한계성 지적 정권 심판론 강해 분위기 반전은 어려울 듯

50%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황 평론가는 “충성도는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할 경우 해당 정당 투표 또는 기권을 선택하지, 상대방을 찍어주지는 않는다”면서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독려해 사이 진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곧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 당일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 이유는 △여론조사 무응답자의 투표 가능성 △여론조사 응답자 편파성 등이다.

황 평론가는 “진보 성향의 유권자, 특히 사이 진보들은 여론조사엔 적극 응답을 하지 않지만, 투표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철 정치평론가 역시 여론조사의 한계성을 짚었다. 그는 “선거 직전

는 국민이 분노할 만한 이슈다. 박 평론가는 “박 후보 측에 김상조, 박주민 등과 같이 거물급 부동산 이슈가 터지거나, 오 후보 측에선 내곡동 관련 결정적인 증언, 증인이 나올 경우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현 판세가 뒤집히긴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권 심판론, 견제론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선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높은 것은 오 후보, 국민의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권 심판·경고 구도가 잡혀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여당이 조직을 동원하고, 네티즌 공세를 펼쳐도 극복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이호승>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안한 靑 정책실장

민주당과 기초 달라 논란 예상

청와대가 1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대해 “성공과 실패를 말하기에는 (상황이) 복잡적”이라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등 민주당 인사들이 연일 정책실패로 인한 부동산 폭등에 관해 사과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기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이 많이 실망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호승 실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그로 인해 자산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며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개개인 입장이 매우 다양해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나 이런 게 어떨 때는 지나치게 강해 보인다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평균적인 주택가격이 10억 20억이 아니다. 3억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무주택이나 유주택이나, 주택을 가진 상태로 전세 사느냐, 없이 전세 사느냐 등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일환 기자 whan@

‘스팩 열풍’에 글로벌 M&A 41년 만에 최대

올해 1분기 1조3000억 달러
美 M&A, 전년비 160% 급증
‘스팩’ 통한 합병 4분의 1 차지

올해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열풍에 힘입어 41년 만에 가장 왕성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금융정보 제공업체 리피티티브는 올해 1분기 합의된 글로벌 M&A 규모가 1조3000억 달러(약 1467조 원)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최소 1980년 이후 41년 만에 최대 규모이자, 2000년 닷컴버블 당시를 뛰어넘는 열기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거래를 조율하는 투자은행(IB)들도 엄청난 수수료 수입을 벌어들이며, 20년 만에 가장 수익성 높은 분기를 맞이했다.

세계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봉쇄 등의 여파로 아직 비틀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글로벌 거래 활동이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출발을 보인다고 FT는 평가했다.

M&A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곳은 미국이었다. 올해 1분기 미국에서는 무려 6541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진행된 것

글로벌 M&A 규모 추이 ※1분기 기준
■ 금액(조 달러, 좌) ■ 건수(1000건, 우)



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0% 급증한 것으로, 글로벌 M&A 시장의 강력한 회복세에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미국에서의 거래 열풍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중앙아시아를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M&A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4.9% 증가했으며, 유럽의 경우에는 24.5% 늘어나는데 그쳤다.

무엇보다 올해 M&A 시장의 광풍을 이끈 주역은 스팩이다. 스팩은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회사(페이퍼컴퍼니)로, 비상장 기업이 상장 스팩에 인수되면 일반적인 기업공개(IPO)보다 쉽게 상장할 수 있다. 일명 ‘백지수표 회사’로 불리며 지난해부터 미국증시에서

우회 상장 통로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벤처캐피털이 지원하는 스타트업의 상장 수단으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 1분기 미국 내 스팩을 통한 합병은 금액상으로 총 172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거래 총액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려 3000%나 폭증한 수치다.

올 들어 성사된 굵직한 거래 중에서도 스팩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가장 규모가 컸던 스팩 딜로는 지난달 테슬라의 경쟁사로 꼽히는 미국 전기차 회사 루시드 모터스가 스팩인 처칠캐피털 코프IV와 240억 달러 규모의 합병에 합의한 사례가 꼽힌다.

이달 들어서도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 이토로가 벤치 코언의 핀테크1분기 미국 내 스팩을 통한 합병은 금액상으로 총 172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거래 총액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려 3000%나 폭증한 수치다.

올 들어 성사된 굵직한 거래 중에서도 스팩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가장 규모가 컸던 스팩 딜로는 지난달 테슬라의 경쟁사로 꼽히는 미국 전기차 회사 루시드 모터스가 스팩인 처칠캐피털 코프IV와 240억 달러 규모의 합병에 합의한 사례가 꼽힌다. 변효선 기자 hsbyun@

마이크론·WD, 키옥시아 인수 검토 美·日 ‘반도체 합종연횡’

품귀현상에 조달 경쟁 치열

반도체 업계의 합종연횡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하는 등 굵직한 인수·합병(M&A)이 연이은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기업 간 거래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테크놀로지(WD)이 일본 메모리 반도체 대기업 키옥시아와 M&A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양사는 각각 키옥시아와 접촉하고 있으며 평가액은 300억 달러(약 34조 원)로 추산된다. 최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에 부품 조달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협상 이유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 성사가 보장된 것은 아니고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도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협상이 타결될 경우 늦은 봄에 성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바메모리가전신인키옥시아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이 주력 사업으로, SK하이닉스와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 도시바 등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원격학습과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키옥시아는 지난해 9월 기업공개(IPO)를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여파에 중단했다. 하지만 반도체 수요 급증에 과거 IPO 당시 160억 달러 수준이던 회사의 가치는 현 300억 달러 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마이크론 본사 전경. 세너제이/AP뉴시스

준까지 치솟게 됐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시 IPO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키옥시아를 노리는 마이크론 역시 세계 최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 중 하나로, D램이 주력인 만큼 키옥시아를 인수해 낸드 분야까지 섭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의 M&A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SK하이닉스는 90억 달러에 인텔 낸드 메모리 사업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달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로부터 심의를 승인 받았다. 그 밖에도 AMD가 자일링스를 350억 달러에 인수하고 엔비디아가 소프트뱅크로부터 ARM홀딩스를 200억 달러에 사들이는 등 통합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업계의 재편 바람이 거세다.

특히 미국 기업들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자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정권의 정책에 힘입어 더 의욕적으로 M&A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영 기자 kodae0@



“격리 없이 여행” 대만-팔라우 ‘트래블 버블’ 대만 관광객들이 1일 남태평양 도서국가 팔라우로 떠나기 위해 타이베이 인근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모여 있다. 앞서 대만과 팔라우 정부는 특정 조건을 전제로 검역 없이 왕래할 수 있게 하는 ‘트래블 버블’에 합의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날 시행했다. 조건에는 6개월 이내 출국 이력이 없고, 3개월 이내에 확진 이력이 없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타오위안/AFP연합뉴스

글로벌 시총 12경원... ‘증시버블’ 경고음

코로나 백신 기대감 1년 새 60% 상승, 세계 GDP 웃돌아

글로벌 시가총액이 12경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시총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계심도 강해질 전망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일 금융데이터 제공업체 퀵(QUICK)과 팩트셋을 인용, 지난 3월 말 기준 전 세계 증시 시총이 약 106조 달러(약 11경9992조 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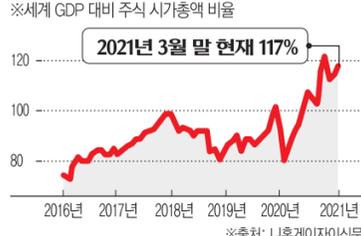
글로벌 시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막대한 투자금이 유입되면서 지난 1년 동안 약 6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증시 시총은 대규모 양적완화 및 재정 투입 등에 힘입어 70% 이상 급증한 45조

달러로 집계됐다. 자금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면서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는 3개월 만에 0.92%에서 1.74%로 급등했다. 상승폭(0.82%포인트)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2016년 4분기 이후 가장 크다.

이처럼 시장이 경기 회복을 선반영함에 따라 과열 징후도 더 뚜렷해지고 있다. 글로벌 시가총액이 GDP를 크게 웃돌게 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명목 GDP는 82조 달러다. 전 세계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무려 20조 달러 이상 차이가 난다.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산출하는 ‘버핏 지수’는 117%를 기록했다.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시장 과

버핏 지수 추이
※세계 GDP 대비 주식 시가총액 비율



열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강조하는 버핏 지수는 100%를 기준으로 이를 넘어서면 주식시장에 거품이 낀 것으로 간주한다. 코로나19 위기를 비교적 빨리 벗어나 회복세에 있는 중국에서는 벌써 투자자금 유입이 약해지고 있다. 중국의 시총은 지난해 말 대비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세 둔화와 더불어 금융정책 긴축 경계감이 부상한 데 따른 결과다.

변효선 기자 hsbyun@

〈증강현실〉

MS, 美 육군에 ‘AR 헤드셋’ 공급

공상과학(SF) 영화에 나오는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군인의 모습이 곧 현실이 될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 육군에 홀로렌즈 증강현실(AR) 헤드셋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해당 계약을 통해 MS는 미국 육군에 최대 10년간 12만 개 이상의 AR 헤드셋을 공급하게 된다. 실질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최대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붙었다. 공급계약 규모는 218억8000만 달러(약 24조7900억 원)에 이른다.

MS가 개발한 홀로렌즈 헤드셋의 가격은 개당 3500달러다. 이 헤드셋은 MS가 자체 개발한 통합 비주얼 증강 시스템(IVAS)이 적용됐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 기반으로 작동된다. 헤드셋을 착용하면 실제 환경과 컴퓨터가 보여주는 홀로그램 영상이 겹쳐 보이게 된다. 이용자는 목소리나 손동작으로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다. 지도와 나침반이 눈앞에 보이며, 열 화상을 통해 어둠 속에서도 적군을 식별할 수 있다.

앞서 MS는 2018년 IVAS를 적용한 시제품을 미군에 총 4억8000만 달러에 제공했으며 이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방부



증강현실(AR) 헤드셋을 착용한 미군 병사.

와 함께 AR 단말기를 활용한 군사 훈련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에 같은 해 업계 1위인 아마존을 제치고 국방부와 10년간 100억 달러에 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MS 관계자는 “이 헤드셋이 군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 육군은 성명을 통해 “병사들이 전투와 예행연습, 훈련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NBC는 MS가 이번 계약으로 컴퓨터 운영체제(OS)와 소프트웨어 등 기존 사업 영역을 넘어 수년간 연구해온 미래 기술의 수익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온라인 펀드 판매 가이드라인 만든다

금감원, 암행점검 후속 조치
하나銀 '미흡' 나머지 17곳 '저조'
은행권 고객 책임자 간담회 예정
"비대면 채널 첫 점검, 주의 당부"

금감독원이 온라인 펀드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진행된 미스터리 쇼핑(암행 점검)에서 펀드 판매 과정에 대한 미흡한 점을 다수 발견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은행권 최고고객책임자(CCO) 간담회를 열어 미스터리쇼핑 결과와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온라인펀드 판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

2020 금감원 미스터리쇼핑 개요

일시	2020년 9월 21일~2021년 1월 11일
대상	은행 8곳, 증권사 10곳(온라인펀드) 보험사 10곳(TM채널)
내용	설명 의무 준수 여부 등 평가해 5단계 등급 부여
결과	은행: 40.7점, 증권사: 31.7점, 생명보험 43.6점, 손해보험: 39.7점

을 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총괄국에서 만들어지면, 금융상품분석국에서 은행권 CCO를 불러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미스터리쇼핑 결과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다만 가이드라인 작업이 늦어지면 미스터리쇼핑 결과 간담회 먼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31일 양일간 '미스터리쇼핑 결과 전달을 위한 보험사

미스터리쇼핑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제대로 팔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종의 '암행 단속'이다. 금감원의 위임을 받은 외부 전문가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서 가장해 금융사를 방문하고 해당 금융사와 금융사 직원이 금융상품을 제대로 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CCO 간담회'도 진행했다. 미스터리쇼핑을 시행한 보험사 모두와 생명·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 부장 등이 참여했다. 금감원이 미스터리쇼핑 이후 업계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미스터리쇼핑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미스터리쇼핑은 업권별 검사국이나 감독국이 조사를 맡았는데 지난해 소비자보

호처의 금융상품판매감독국이 신설되면서 모든 업권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총괄하게 됐다. 올해는 금융상품분석국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앞선 관계자는 "점검 대상 보험사가 모두 최저점이 나와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비대면 채널은 미스터리쇼핑에서 처음으로 점검했는데 좋지 않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미스터리쇼핑은 부문 검사나 제재로 가지 않고, 업계 스스로 고치도록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진행된 미스터리쇼핑 점검 후속조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8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기업·부산)과 10개 증권사(삼성·키움·한국포스·신한금융·카카오·하나금융·KB·한국투자·미래에셋·NH)를 대

상으로 온라인 펀드 판매 미스터리 쇼핑을 했다. 조사 결과, 하나은행이 유일하게 '미흡'을 받았고 나머지 17개사는 모두 '저조' 등급이었다. 세부적으로 투자자의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 성향 진단 제도를 여러 번 진단할 수 있게 한 점과 진단 결과도 문자 형식으로 간략하게만 보여주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같은 기간 보험사 TM채널의 보장성보험판매 관련 미스터리쇼핑도 진행했다. 평가상품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등 보장성보험이다. 평가 대상은 TM채널을 통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판매실적 상위 10개사인 생명보험(동양·라이나·신한·흥국·DB)와 손해보험(롯데·메리츠·흥국·DB·MG)가 대상이었다. 서지연 기자 sjy@



여승주(왼쪽) 한화생명 대표가 1일 한화생명의 판매전문회사 한화생명금융서비스(주) 출범식에서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에게 사기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생명

한화생명, 설계사 없는 보험사로 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출범

국내 최대 보험 판매법인 탄생
구도교 대표 "업계 최고 보상"

한화생명이 제판분리를 통해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 GA(법인보험대리점)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본격 출범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1일 서울 여의도 63한화생명빌딩 별관 1층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구도교 대표이사, 정미경 FP 명예부사장, 기혜영 FP 명예이사 외 대표 FP 20여명과 대표 지역단장 및 지점장 등 주요 임직원이 참여했다.

이 회사는 '보험의 퍼스트 앤 넥스트(First & next), 고객의 삶과 함께하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라는 비전 아래 자율영업체제를 구축하고 성과중심문화로 체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총자산 6500억원, 500여개의 영업기관과 1300여명의 임직원, 1만9000여 명의 FP로 구성된 초대형 판매전문회사다. 출범과 동시에 GA업계 1위로 올라섰다.

매출액 규모도 현재 GA시장을 압도한다. 2020년 한화생명의 전속상품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은 약 1조 원으로 현재 대형 GA 5개사 평균 매출액의 2배가 넘는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판매전문회사로 출범하면서 기존 전속채널이 가진 장점은 모두 가져간다. 대형 생명보험사가 지닌

FP교육 노하우가 가미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은 그대로 제공된다. 또 업계 최고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수료 지급이 가능하고 경쟁력 높은 수수료 체계를 구축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GA의 특징인 다양한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메리츠, 한화, 롯데, MG, 흥국, 삼성, 현대, KB, DB 등 9개의 손해보험사와 제휴를 맺었다. 손보제휴센터를 전국 각 지역단에 설치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아우르는 상품 컨설팅을 제공하며 보험금의 청구나 심사를 지원해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센터도 신설해 자동차보험비교견적서비스와 고객문의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의 대형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출범하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지닌 판매전문회사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이사는 "제판분리를 통해 판매에 집중하는 만큼, 영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며 "업계 최고의 보상체계를 만들어 판매 물량뿐만 아니라 조직규모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디지털 솔루션 및 내·외부 전문가 지원 등 차별화된 영업지원을 통해 타 GA와는 격차를 벌려가겠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은행장 만난 은성수 "농지 투기성 대출 회수"

(금융위원장)

"대출 과정 잘못되면 바로잡아야"
연1000억 서민 금융지원도 촉구
"외면하면 금융사 아닌 개인회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농지 취득 과정이 잘못됐을 시 대출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냈다면 농지 취득 자체가 취소 나올 것"이라며 "원인 행위가 잘못됐기에 그것으로 대출받은 건은 당연히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출 과정도 잘못됐다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농지 담보물이 비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대출금을) 회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들이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지 100억 원가량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LH 직원이 일을 하면서 농사를 병행하



은성수(왼쪽 네 번째)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CEO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허위·과장 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또 쌍용자동차의 잠재적 투자자 HAAH오토모티브로부터 연락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당초 이달 중으로 HAAH오토모티브로부터 인수意向서(LOI)를 받아 사전회생계획(P플랜)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 결정을 미루면서 업계에서는 쌍용차가 P플랜이 아닌 법

정관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은 위원장은 "(제가) 출근할 때까지 HAAH오토모티브에서 연락 없었다"며 "(산업은행과)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얘기해 계획된 대로 나갈 방안"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위해 은행이 연간 1000억 원의 출연금을 내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에 대해 은 위원장은 은행, 보험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봤다. 현재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만 출연금을 내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은행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 우리 금융 시스템과 동떨어져 할 수 없다"며 "(서민금융법을) 모르겠다'고 하면 금융사가 아닌 개인회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은행 시스템이 안정되면 그 수혜는 은행이 볼 것"이라며 "(행장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위위원장이 추진하는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 보증제'에 대해 은 위원장은 "작동된다면 (소비자들이 대출을) 더 쉽게, 싸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청년들 부담을 줄이려면 기간이 길면 좋다"며 "금융위가 40년 모기지 대출을 도입한 것도 주거 사다리 역할 기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수빈 기자 bean@

당국, 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 확대 압박

"금리 10% 이내 상품 목표치 내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직접 관리
토스뱅크 7월 출범 전 제출받기로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게 연간 중금리대출 비중을 얼마나 늘릴지 목표치를 받기로 했다. 설립 취지와 달리 중금리대출이 많지 않고 시중은행처럼 고신용자 대출에 치중하자 정책을 통해 직접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로부터 '가계대출 총량 대비 중금리대출 비율'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수치를 담은 중금리대출 계획서를 조만간 제출받아 이르면 이달 중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

중금리대출은 통상 옛 신용등급 4~6등급 수준의 중신용자에게 연 10% 이내의

한 자릿수 금리로 내주는 신용대출 상품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금리대출 계획이 이번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해당 대책 발표가 끝나고 계획서 최종본을 제출받아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당국의 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토스뱅크에 대해서도 오는 7월께 정식 출범하기 전 마찬가지로 중금리대출 계획서를 제출받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대책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당초 설립 취지였던 중금리대출 확대를 그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 차원이다. 금융당국은 두 은행이 중금리대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계획서를 받은 뒤 정기적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은 인가

를 받을 때 중금리대출 확대 등을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법 1조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에 편의를 제공하라'인데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에 집중하는 등 기존 은행과 다르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당국의 압박이 계속되자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올해들어 일제히 중금리대출 확대를 약속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매년 1조 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던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계획보다 많은 1조3800억 원을 공급했다며 "올해는 공급 규모를 작년보다 늘릴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케이뱅크도 2023년까지 전체 대출 중 4등급 이하인 중저신용자 고객의 누적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증권으로 퇴근길에 만나는 실시간 미국주식

해외주식도 KB증권에선 **오후 5시부터!**
한발 빠른 해외투자를 시작하세요

오후 5시부터 만나는 미국주식
거래가능 시간 확대

뉴욕, 나스닥, AMEX 미국 3대 거래소
실시간 시세 무료 지원

매매시 환전 수수료 없이
원화로 거래하는
글로벌원마켓

주문가를 자동으로 결정하고 매매하는
알고리즘 매매 솔루션

✓ 손쉽게
계좌개설하기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1307(2021년 3월 12일)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원금손실가능 *투자 전 설명청취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 *미국 주식수수료 온라인 기준 0.25%(매도시 0.00051% 제비용 별도)이며,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 *서비스 중도해지 시 환전수수료 발생 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국가: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알고리즘매매 가능국가: 미국, 중국, 홍콩 *미국 정규거래시간(22시 30분 - 익일 5시, 서머 타임 적용 기준) 외의 시간은 시간외거래시간이며, 시장조성자들의 제한된 참여로 정규장 대비 호가가 비정상적으로 표시될 수 있음

KB 증권

“SK이노, LG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 침해 안 했다”

美 ITC, 특허권소 예비심결
양극재 등 LG가 제기한 특허 4건 ‘유효성·침해’ 동시에 충족 못해 SK “독자 기술력 인정받은 것”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019년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기를 잡았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심결(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ITC는 소송 당사자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특허의 유효성, 침해 사실 등 요소가 모두 충족되면 특허침해를 인정한다.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 코팅 관련 517, 241, 152 특허, 양극재 관련 877 특허 중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사실이 동시에 인정된 특허가 없었던 것이다. 이중 특허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들은 241, 152, 877 특허다.

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이중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신규성(Novelty), 비자명성(Non-obviousness), 명세서 기재 요건(Requirements for Specification) 등이다.

신규성이란 특허 대상 내용이 기존에 공개된 것과 비교해 새로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비자명성이란 특허 내용이 사소한 정도 이상의 진보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며, 명세서 기재 요건은 상세한 설명, 실시 가능, 최적의 실시 예 등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ITC가 공개한 판

결문을 보면 241 특허의 1, 2, 3, 24, 25 청구항은 “특정 선행 기술에 비취볼 때 자명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877 특허의 5, 18, 26 청구항에 대해서도 비자명성을 충족하지 못해 유효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152 특허의 1, 2, 3, 5, 16, 19, 20 청구항의 경우 선행 기술과 비교해 자명하거나, 예견되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152, 877 특허에 대해 침해 사실을 인정했지만, 517 특허와 241 특허에 대해서는 이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제품이 없다고 언급했다.

특허침해 소송은 8월 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ITC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당사는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 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리막 코팅 관련 SRS 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

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침해는 인정됐지만, 무효로 판단 받은 SRS 152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도 입장문을 내고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1년에 LG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해, 2014년까지 진행됐던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런데도 또다시 같은 미국 특허(517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이것은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 식의 과도한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SK이노 수입 금지 10년’ 바이든 거부권 불 땀기나

SK “현지 분위기 반전 기대”
LG “비밀 침해와 별개 사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SK 측 손을 들어줘 이번 판단이 ITC 결정에 대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좌우할지,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ITC는 양사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가 LG 측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수입 금지 10년을 결정했다.

SK 측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특허로 지정할 수 없는 모호한 것이 영업비밀”이라며 “영업비밀보다도 중요한 특허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SK가 억울하다는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는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한 채 결정됐다”며 “그렇게 파울(반칙) 패를 당했는데 이번 특허 소송으로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LG 측과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합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을 것이

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2조~3조 원 수준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1조 원 안팎을 제시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관건은 대통령 거부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11일까지 ‘SK 수입 금지’를 결정한 ITC 판단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특허침해 결정이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SK 측은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이 조지아 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내기 위해 압박 수위를 한 층 더 높인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을 지낸 샐리 예이즈 전 차관도 영입했다. 최근에는 로비회사 캐피틀시티그룹을 고용하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그는 캐피틀시티그룹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측과 관계가 깊고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과도 연이 닿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는 중이다. 거부권 행사는 미 행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인 만큼 예측을 내놓는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김대영 기자 kady@

LG, 17인치 고성능 노트북 ‘울트라기어 17’ 출시

인텔 11세대 프로세서 탑재
영상작업·게임 구동 최적화



LG전자 모델이 17형 대화면에 인텔 11세대 최신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외장 그래픽카드를 탑재해 영상작업이나 게임을 구동할 때 빠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고성능 노트북 ‘LG 울트라기어 17’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LG전자가 1일 대화면의 고성능 노트북 ‘LG 울트라기어 17’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WQXGA(2560x1600) 고해상도의 17형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생생하고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또 인텔 11세대 프로세서 타이거레이크(Tiger Lake)와 엔비디아 외장 그래픽카드(GEFORCE GTX 1650Ti)를 탑재해 영상작업이나 게임을 구동할 때 빠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LG 울트라기어 17은 고성능 노트북임에도 무게가 약 1.95kg에 불과해 휴대성도 탁월하다. 80와트시(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2개의 쿨러로 내부 열을 빠르게 냉각시켜주는 ‘듀얼 파워쿨링 시스템’으로 고사양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다. 사용자가 확장 슬롯을 이용해 저장장치(SSD)와 메모리(RAM)를 업

그레이드할 수 있는 ‘듀얼 업그레이드 시스템’도 갖췄다. LG 울트라기어 17의 출하가는 224만 원(i5·8GB·SSD512GB·GTX 1650Ti 기준)이다.

LG전자 한국영업본부 김선형 HE마케

팅담당은 “LG 그램, LG 그램360에 이어 고성능 노트북 브랜드인 ‘LG 울트라기어’에서도 대화면 노트북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한화큐셀 ‘獨 생활소비재 어워드’ 2년 연속 1위

한화큐셀은 1일 독일 보도 전문채널 엔티비와 독일 서비스품질연구소(DISQ)가 주관한 ‘생활소비재 어워드’ 태양광 부문에서 2년 연속 종합 1등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45개 부문에서 수상기업을 선정

했다. 태양광 부문은 인지도가 높은 11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종합 만족도, 추천도, 재구매 의사 등의 소비자 평가가 진행됐다. 한화큐셀은 세 분야에서 모두 최고점을 획득했다.

이번 어워드에는 4만 명 이상의 고객이

생활, 가정, 정원 등 45개 부문에서 580개 이상의 기업과 브랜드를 평가했다. 독일은 태양광을 주요 소비재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유럽에서 최대 태양광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품질 검사 기준보다 최대 3배에 이르는 혹독한 조건에서 품질 관리를 진행한다.

김대영 기자 kady@

현대차-수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맞손’

연구개발·M&A 등 3兆 투입

현대자동차와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협력 체계를 강화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나선다.

현대차는 1일 수은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사에서 ‘미래 모빌리티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산업금융 협력 프로그램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장재훈 현대차 사장, 방문규 수은 행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차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은으로부터 미래 모빌리티 사업부문에 2023년까지 3조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받는다.

이는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국내외 시설투자, 인수·합병(M&A) 등에 투입되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중견 협력사 육성에도 사용된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2025년까지 미래 사업 역량 확보를 위해 23조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부문별 투자 금액은 전동화 10조 8000억 원, 수소 사업 4조 1000억 원, 자율주행 1조 6000억 원, 모빌리티서비스·플랫폼 1조 2000억 원, 커넥티비티 1조 원, UAM·로보틱스·AI(인공지능) 4조 8000억 원이다.

이주혜 기자 winjh@

현대차, 3월 글로벌 판매 ‘37만5924대’

전년 대비 22.4% 증가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국내 7만3810대, 해외 30만2114대 등 세계 시장에서 총 37만5924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3월보다 22.4% 증가한 수치다. 국내 판매는 전년보다 2.3%, 해외 판매는 28.6% 늘었다.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산 차질과 판매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판매량이 늘었다.

국내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7만3810대로 집계됐다. 특히, 세

계 수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넥쏘는 934대 판매되며, 월간 최대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

한편 기아는 지난달 국내에서 5만1011대, 해외 20만351대 등 총 25만1362대를 판매했다. 전년 3월 대비 8.6%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달 국내 판매는 전년과 비슷한 반면 해외 판매는 11.0%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스포티지가 2만9505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했다. 이어 셀토스 2만 8333대, 쏠렌도 2만2604대 등 판매 상위 3차종 모두 SUV였다.

유창욱 기자 woogi@

사전에 예약 1년치 받았는데... 웃지 못한 현대차·기아

반도체發 신차 생산 제동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으로 감산 등에 나선 가운데 국산차 역시 생산 차질이 본격화됐다. 특히 최근 사전예약에서만 1년치 이상 생산물량을 확보한 현대차그룹의 첫 전용 전기차는 초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생산 차질을 겪고 있다. 현대차는 반도체 부품 공급 문제로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울산 1공장을 휴업한다고 밝혔다. 울산 1공장에서는 소형 SUV 코나와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생산 중이다.

문제는 역시 반도체가 들어간 부품 탓이다. 아이오닉 5는 모터와 감속기 등을 포함한 'PE 모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모자라 감산을 시작했다. 현대차는 매주 단위로 반도체 재고를 점검하고 직접 반도체 메이커와 차량용 반도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고 있다. 부품 공급 차질로 4월 한 달 동안 약 6500대의 아

모터·감속기 등 반도체 수급난 아이오닉5, 月 6500대 생산 손실

6월 중순 공급 부족 해소 기대 '7월 출시' EV6, 차질 덜 할 듯

이오닉 5 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 봤다.

아이오닉 5는 유럽에 먼저 수출한다. 올해 3000대 판매를 계획했으나 현지에서 시작한 사전예약에 1만 대 가까이 수요가 몰렸다. 국내 역시 사전예약 첫날 수요가 2만3760대에 달하는 등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번 감산 탓에 아이오닉 5 초기물량의 출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는 상대적으로 여파가 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기아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EV6의 사전예약을 받았다. 그 결과 첫날에만 2만1016대가 몰려 올해 국내 판매 목표



현대차 차세대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

(1만3000대)를 160% 초과했다. 다만 기아 EV6는 7월 출시를 예고한 만큼 초기 출고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 중이다. 현대차그룹 내부적으로 오는 6월 중순께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 차량을 생산하는 업체 상황도 녹록지 않다. 한국지엠(GM) 부평 2공장의 가동률은 지난 2월 8일부터 3월 말까지 50%에 머물렀다. 문제는 이 여파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데 있다. 미국 GM의 감산

은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르노삼성차는 차량용 반도체를 유럽에서 조달하고 있는 덕에 상대적으로 수급이 원활하다.

그러나 최근 내수판매 위축과 수출물량 감소 등이 이어진 탓에 반도체 부족 여파가 달하다는 평가일 뿐 확보물량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쌍용차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회사 내 각 작업을 진행 중인 쌍용차는 이미 2월 판매부터 전년 대비 40% 수준에 머물고 있

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주요 협력사의 부품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미래차의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의 수급 불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팔을 걷었다. 정부는 이날 제7차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열고,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 역시 자동차용 반도체를 장기적 관점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최정우 회장 창립 53주년 기념 메시지

“철강 넘어 그린 & 모빌리티로” 포스코, 사업구조 대전환 선언

“이차전지소재 생산능력 증강 전기차 파트너로 신뢰 향상 수소 사업 인프라 구축 선도”

포스코가 그룹 내 다양한 친환경차 역량을 기반으로 '그린 & 모빌리티'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1일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창립 53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그룹 사업구조를 '그린 & 모빌리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저탄소·친환경으로 대변되는 메가트렌드 전환 국면에서 포스코그룹은 철강을 넘어 전기차 강재 및 부품, 이차전지소재, 수소 등 친환경 사업의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룹의 핵심사업으로 육성 중인 이차전지소재 사업의 생산능력을 증강하고, 그룹 역량을 결집해 리튬, 니켈, 흑연 등 원료에서부터 양·음극재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전기차 전용 강재, 모터코어 등 핵심부품, 이차전지 원료 및 소재를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이자 전기차 시장의 신뢰받는 파트너로 성장하자”라고 했다.

포스코는 1월 친환경차용 제품·솔루션 공급 등 그룹사 역량을 결집해 친환경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친환경차 제품·솔루션 통합 브랜드인 'e Autopos(오토포스)'를 론칭한 바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무방향성 전기강판 하이퍼(Hyper) NO, 전기차용 고장력 강판 및 배터리팩 전용 강재는 물론 포스코케미칼이 생산하는 양·음극재,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포스코SPS가 생산하는 전기차 구동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지난달 31일 포항 Park1538 개장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포스코

모터코어 및 수소차용 배터리 분리판 소재 등과 함께 이를 활용하는 맞춤형 솔루션까지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포스코그룹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는 물론 이들의 핵심 원료인 리튬과 니켈, 흑연을 공급할 수 있는 이차전지소재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리튬 22만 톤, 니켈 10만 톤을 자체 공급해, 2030년까지 양극재 40만 톤, 음극재 26만 톤 생산체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암모니아 수소 추출 기술개발 협력과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 참여 등 지속적인 수소사업 추진을 통해 그린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 가치사슬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 저장 및 운송용 강재와 솔루션을 개발하여 관련 인프라 구축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 회장은 “안전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본”이라며 “안전에는 노와 사, 포스코와 협력사, 원청과 하청이 따로 없는 만큼 나와 내 동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분이 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Belleville3Hands

Time is our tradition

1924년 탄생한 정통 스위스 독립 시계 브랜드, 그로바나(GROVANA)는 스위스 테니켄(Tenniken)의 자체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elleville 3hands
STEEL CASE
1765.1594
41.5 mm

KOI COMPANY Co.,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중소 'ESG 경영' 공감하지만 인력·자금 한계

기업 ESG 도입 요구 목소리 커
생존위기 상황 사회 기여 난망
환경 규제 더해지면 부담 가중
“가이드라인 등 맞춤형책 절실”



2021년 대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준비가 거의 전무한 데다 역량도 부족해서다. 따라서 정부의 맞춤 지원책이 필요하단 제언이 나온다.

1일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들이 잠재적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비재무적 성과인 ESG 요소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업의 ESG 정보공개와 기관투자자의 ESG 투자 확대 등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ESG 관련 정보공개의 경

우 상장기업에 대상으로 ESG 요소를 공시하도록 한 상태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에 내년부터 ESG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자산 절반을 책임투자에 적용하고, 한국투자공사(KIC)는 투자이사 결정 전체에서 ESG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해당 방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만 공시하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2026년까지 전체 상장사에 의무화하고, 환경과 사회 보고서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상장 중소기업까지 ESG 요소를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셈이다.

상장 여부와 별개로 중소기업에도 ESG 경영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상황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추진감 중소기업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의 ESG 도입은 이전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구조적인 한계가 발목을 잡는다. 추 본부장은 “중요성은 알지만,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생존을 위해 애쓰는 상황에서 ESG가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와 기대감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 분야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이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제가 더해지면서 더욱 부담이 되기도 한다”며 현실적인 문제도 언급했다.

당장 대응이 어려운 점도 문제다. 앞서 2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한 글로벌 ESG 확산 추세가 국내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기업의 ESG 대응수준은 선진국 10점을 기준으로 대기업이 7점이지만, 중소기업은 4점에 불과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도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탄소 중립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제

대로 준비를 시작한 기업은 15.1%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노민선 중기연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준비가 미흡한 데다 경영 역량과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장 반응도 비슷하다.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른 시간 내엔 어렵다”며 “일할 직원이 없는데 지배구조를 신경 쓸 수 없고, 매출이 나오지 않는 데 사회적 기여를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노 단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활성화 방안으로 △중소기업 ESG 가이드라인 제정 △중소기업 ESG 경영성과 확산 등을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 ESG 경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 기반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권철승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속히 도입”

저신용 소상공인 저리 융자
청년창업 대책 이달 내 발표



“손실보상제도의 조속한 도입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겠다.”

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권철승(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희망 회복을 해 노력하겠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당일 신청, 당일 입금을 원칙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것. 이어 △소상공인 경영과 상권 회복 △혁신벤처 및 스타트업의 선도형 경제 주역 육성 △전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 주체 △지역균형 뉴딜 성공 △상생 경제 등의 중소기업부의 연간 계획을 밝혔다.

권 장관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부딪친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새희망자금, 버팀목 자금 등 2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라며 “지난해 새희망자금으로 251만 명에게 2.76조 원을, 올해 1월 버팀목자금으로 290만 명에게 4.09조 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한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을 4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전 부처 창업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3개년 계획도 6월 중, 시니어 창업 활성화 방안도 7월 중으로 구체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K-유니콘 프로젝트’, 복수의결권 도입 등 유니콘 탄생을 위한 성장생태계도 조성한다”며 “올해부터는 점프업 펀드(지난해 총 1조 원 규모 조성)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는데,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허용을 비롯해 투자 조건부 융자·조건부 지원전환계약 도입 등 벤처투자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구매 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도 확대한다. 5월경 산업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비대면 분야 등 신산업 제품 지정 확대, 중기경쟁제품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권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 체질개선에도 나설 예정인데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사업화를 개선과 기술거래 활성화 방안을 6월 중 마련하겠다”며 “4월 중 현장 친화적 자금지원체제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대동공업→대동 사명 변경 “미래농업 선도”

작년 영업이익 38% 증가 최고
자율주행 농기계·로봇 출시
북미 시장 공략 등 전략 제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대동공업이 ‘대동’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스마트 농기계 등 미래 농업 선도에 나선다.

1일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대동은 연결기준으로 매출 8957억 원, 영업이익의 331억 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각각 7.3%, 37.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특히 ‘미래농업 선도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내 자율주행 농기계 출시 △북미 시장 공략 강화 △소통과 협업을 위한 공간혁신 △창조적 조직 문화 구축 △경영 시스템 개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행하는 등 미래 사업을 위한 경영 전략 수립 및 조직 혁신에 주력했다.

신사업을 준비하면서 기업 이미지 전환도 추진했다. 이전 사명 ‘대동공업’이 전통 제조업 기업 이미지가 강하다는 판단하에, 7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미래농업 기업 이미지로 전환하고자 ‘대동(DAEDONG)’으로 변경했다.

올해는 자율농기계, 농업 로봇 등 ‘스마트 농기계’, 새로운 이동 및 운송 수단 ‘스마트 모빌리티’, 정밀농업(Precision Farming) 솔루션을 기반으로 무인 자동화 운영하는 도심형 ‘스마트팜’ 등을 미래

농업의 3대 핵심 사업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달 스마트 직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트랙터 HX시리즈, 농기계 원격 제어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ICT 기반 ‘대동 커넥트(Connect)’ 서비스를 선보였다. HX트랙터는 앞서 출시한 직진 자율주행 이앙기처럼 직진 구간에서는 핸들 조작 없이 운전할 수 있다. 올해 말에는 환경을 인식해 농기계가 작업 경로를 생성하고 이를 따라서 선회까지 자동으로 작업하는 트랙터를 선보일 계획이다.

대동 커넥트는 원격으로 고객의 농업 현황과 농작물 생육 자료를 수집 분석해 정밀 농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농기계의 작동 및 조작까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기계 원격 관리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올해부터 농업 솔루션 제공에 필요한 농작물 생육 빅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다.

원유현 대동 총괄사장은 “지난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최대 실적 달성’과 ‘미래농업 비전 수립’이라는 2가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라며 “올해는 미래농업 사업 원년으로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팜 등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고 성장 발판을 확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산업용 송풍기에 모뎀 붙여 원격관리

SKT-동양 스마트공장 협력... AI-클라우드 기반 유지·보수

공장 설비를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형 서비스가 나왔다.

SK텔레콤(SKTEL)은 동양과 ‘스마트 팩토리 사업 추진을 위한 제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동양은 국내 1위 산업용 송풍기 생산 업체다. 산업용 대형 송풍기 설비는 보일러의 통기, 터널의 송풍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두 회사는 송풍기 도입 공장의 운영 및 유지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AI와 클라우드 기술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협력을 추진했다. 송풍기 설비의 핵심 부품에 모뎀을 부착, 원격으로 SKT ‘메타트론 그랜드뷰’ 서비스와 연결하는 것이 이번 협력의 핵심이다.

‘메타트론 그랜드뷰’는 SKT가 자체 개발한 AI 및 클라우드 서버 기반의 스마트공장 솔루션이다. 월 구축형 서비스로 제공되며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의 이상치 및 고장 전조의 알람 △설비 유지보수 기록 및 DB화 △AI 분석 모델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축형 서비스로 송풍기 설비 도입 공장의 운영 인력 절감 및 하자 보수 등의 문제점 해결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동양은 산업용 송풍기 설비 관련 최적의 온도, 진동 및 전류 센서와 PLC 데이터 수집장치를 함께 사업화할 예정이다. 송풍기 선후 공정에 연결된 모터 등 장비들에 대한 컨설팅과 소각로 등 대형 환경설비에 대한 구축 노하우도 제공할 예정이다.

양사는 작년 10월부터 충남 예산 소재



최낙훈(오른쪽) SK텔레콤 스마트 팩토리 컴퍼니장과 정의준 동양 플랜트사업본부 본부장이 업무협약서를 들고 있다.

동양 플랜트 예산공장의 대형 송풍기와 모터에 SKT 그랜드뷰 서비스를 연동했다.

정의준 동양 플랜트사업본부장은 “SKT와의 협력으로 산업용 송풍기와 환경설비 기반의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제조 영역에서 설비 관리 서비스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최낙훈 SKT 스마트팩토리컴퍼니장은 “첨단기술과 전통 제조 분야 기술을 융합해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정윤모 기보 이사장 “중소·벤처 혁신 주도”

창립 32주년 기념식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창립 32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혁신을 선도하는 종합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기보는 1일 부산광역시 본사에서 창립 32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기보가 지난 32년간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임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선도적 역할 수행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 강화와 개방형 혁신 주도 △우수한

스타트업과 혁신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에 대응한 핵심역할 수행 등을 제시했다.

기보는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핵심 분야 중소기업에 24조4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이전 및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보증·융자·투자를 결합한 복합금융을 지원하며, 탄소중립 전담조직을 확대해 녹색금융을 선도하겠다고 구상도 내놨다.

정 이사장은 “축적한 기술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선도형 경제를 주도할 혁신성장 종합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자”고 강조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MZ세대 쇼핑 아지트, 몸값 뛰는 '온라인 패션몰'

온라인 패션 편집숍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의 SSG닷컴이 온라인 패션 편집숍 2위 기업인 더블유컨셉코리아(이하 W컨셉)를 인수하면서 이들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무신사로 대표되는 온라인 패션 편집숍은 2030 MZ세대들의 지지를 받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 주목받기 시작했다. 초창기만 해도 이들의 거래액은 연 수백억 원에 불과해 종합몰과 오픈마켓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부터 비대면 쇼핑을 선호해온 MZ세대가 소비를 주도함에 따라 매년 큰 폭의 성장을 거두면서 수천억~1조 이상 거래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신세계그룹의 통합온라인쇼핑몰 SSG닷컴은 온라인 패션 편집숍 플랫폼인 W컨셉을 인수한다고 1일 밝혔다.

SSG닷컴은 W컨셉 최대주인 사모펀드(PEF) IMM프라이빗에쿼티(지분 80%), ISE커머스(지분 20%)와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주식매매 본계약(SPA)을 체결했다.

2008년 위즈위드로 시작한 W컨셉은 회원 수만 500만 명에 달해 무신사에 이

신세계, 패션몰 'W컨셉' 인수 무신사 이어 2위 회원수 500만

비대면 쇼핑 추세 따라 큰폭 성장 온라인 패션 편집숍 거래 수조원 대기업·글로벌 기업까지 눈독

은 국내 2위 온라인 패션 편집숍이다. SSG닷컴측은 매각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앞서 W컨셉이 CJ E&M과의 매각 협상이 인수대금 때문에 결렬됐던 점을 감안할 때 최소 4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W컨셉은 2017년 IMM PE가 지분 80%를 600억 원에 인수했다. 불과 3년여 만에 몸값이 6~7배 뛴 셈이다. W컨셉의 매각 금액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매출과 거래액의 꾸준한 상승이 한몫했다. 2017년 IMM에 인수될 당시 W컨셉의 연간 거래액은 900억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거래액이 3000억 원 가까이 늘어났고 매년 2배가량의 높은 거래액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매출 역시 2016년 166억 원에



서 2019년에는 526억원까지 커졌다. 지난해 매출 추정치는 1000억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번 인수전에는 W컨셉의 경쟁사인 무신사까지 뛰어들며 온라인 패션 편집숍의 새로운 골리앗이 등장할지도 이커머스 업계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쿠팡에 대응해 온라인 경쟁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SSG닷컴이 결국 인수전에서 승리했다.

SSG닷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거쳐 W컨셉을 공식 편입하고 SSG닷컴과 별도의 플랫폼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물류를 신세계그룹과 공유함으로써 SSG닷컴과의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

다. W컨셉 입점 브랜드가 신세계 계열 오프라인 점포에 입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신세계의 후광을 입은 W컨셉과 무신사와의 경쟁구도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온라인패션플랫폼 업계 1위 무신사는 회원수 780만 명으로 W컨셉보다 50% 이상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양사의 거래액 차이도 크다. 무신사는 업계 최초로 거래액 1조 원을 돌파했으며 현재 1조2000억 원에 육박한다. 2위와 3배 이상 거래액 격차를 벌린 것이다.

W컨셉은 1위를 따라잡는 동시에 후발 주자들의 공세에도 맞서야 하는 형국이다. 크로키닷컴이 운영하는 '지그재그'는 입점

브랜드가 4000여개에 달하고 차별화한 결제 시스템인 '제트(Z) 결제' 이용자가 1년여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서며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Z결제는 입점한 각기 다른 쇼핑몰의 상품을 하나의 장바구니에 담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을 표방하는 '에이블리'도 위협적인 존재다. 누적 앱 다운로드 수 1600만 건을 기록한 에이블리의 거래액도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액 수천억 원대 패션 쇼핑몰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커머스 업계도 온라인 전문 편집숍들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패션 편집숍은 전문몰의 가능성을 보여준 하나의 대표 사례일뿐이다. 인테리어, 생활용품, 리퍼브, 홈트레이닝 등 다양한 카테고리 전문몰들이 집콕 장기화로 온라인에서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까지 전문몰 인수에 눈독을 들일 만큼 이들은 매력적인 존재로 부상했으며 앞으로 전문몰에 대한 투자와 인수는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김혜지 기자 heyji@

편의점 '동남아 러시' 왜

"몽골, 베트남에 이어 말레이시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K 편의점'의 해외 진출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미래 생존을 위해 시장 개척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성장성이 큰 데다 'K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 시장 안착이 비교적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CU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1호점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말레이시아는 2018년 몽골에 이어 CU가 진출한 두 번째 해외 시장이 됐다.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

의점 브랜드 Mynews.com(이하 마이뉴스닷컴)을 운영 중인 현지 편의점 업체 2위 업체다. 약 530개 점포를 보유한 마이뉴스닷컴은 약 2400개 점포를 보유한 업계 1위 일본계 세븐일레븐에 도전하게 된다.

GS25는 지난달 베트남 빈증 지역 랜드마크 빌딩 1층에 100호점(베트남 GS25 베카맥스타워점)을 오픈했다. 2018년 시장 진출 이후 3년 만의 성과다. 진출 초기 호찌민 내 출점을 이어 가던 베트남 GS25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호찌민 위성도시인 빈증, 붕다우 지역으로 진출 범위를 확대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GS25는 코로나 리스크에도 베트남 시장에서 외형 확대 기조를 이어왔다. 지난해엔 33개의 신

성장성 크고 K 브랜드에 호감 CU, 말레이시아 1호점 진출 GS25, 베트남 100호점 열어

규 점포를 열었다. 이로 인해 올해 1~2월까지 베트남 GS25 매출은 전년대비 46.7% 늘었다. GS리테일은 올해 가맹점 전개를 본격화해 100개 이상 점포를 추가 출점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 내 'K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사업에 활용한 점이 성장에 주효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지난해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 방영 당시 베트남 현지 고객이 매장에 방문해 사진도 찍고 GS25 유니폼 조끼를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가 오기도 했다"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크다"고 설명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몽골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은 성장성이 크면서도 한국에 우호적이라는 특성이 있어 국내 편의점 업체로선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은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기업 Mynews Holdings(이하 마이뉴스 홀딩스)의 자회사인 MYCU Retail과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편의점 업체 최초로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는 성장성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평가된다. 편의점의 주요 소비층인 20~39세가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한다. 구매력도 크다. 말레이시아의 1인당 GDP는 약 1만1000달러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3위에 해당한다. 인구당 편의점 수는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CU는 기존과 다르게 로컬 브랜드를 보유한 해외 기업에 브랜드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말레이시아에 진출한다.

파트너사인 마이뉴스 홀딩스는 1996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로컬 편



이마트, 1+1 '랜더스데이'

이마트가 신세계그룹 야구단 'SSG 랜더스' 창단과 개막을 기념해 1일부터 4일간 상반기 최대 규모 행사 '랜더스데이'를 진행한다. 4일간 '1+1' 행사만 80여 종이며 총 행사상품은 500여 종에 달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이마트 엄선한 1+1등급 전 품목을 행사카드 구매시 40% 할인 판매한다. 2~3일은 러시아산 활대계를 8톤 한정으로 초특가에 선보이는 행사를 진행하며, 30구계란 1판은 30% 할인한 4886원에 판매한다. 사진제공 이마트



진짜

유통가 만우절 상품들

가짜



"재밋어야 팔린다." 만우절을 맞아 식품·패션업계가 편 마케팅에 나섰다. 주력 소비층이 MZ세대로 교체되면서 B급 감성에 열광하는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업체는 가상 브랜드를 먼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내고 이색적인 컬러 제품도 실제로 출시하는가 하면 SNS에 만우절용 가상 제품을 올려 '편수머'와 소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일 빙그레는 매운맛 아이스크림 '멘붕어싸만코'와 함께 더위사냥을 '졸음사냥'으로 재단장한 제품을 만우절에 맞춰 출시했다. 특히 멘붕어싸만코는 기존 '붕어싸만코'를 매운맛 버전으로 재해석한 아이스크림으로, 출시 이전부터 공식 인스타그램에 카툰 형식으로 예고해 왔다. 멘붕어싸만코는 120만 개 한정 판매된다.

졸음사냥은 '더위' 대신 '졸음'을 사냥한다는 뜻을 가진 에너지드링크 아이스크림이다. 실제로 타우린 1000mg을 함유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드링크 한 캔 분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빙그레 측은 만우절을 맞아 익숙한 제품의 새로운 모습이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샘포의 간식 브랜드 질러도 만우절을 맞아 육포 마니아를 위한 '질러肉PHO' 기획력을 선보였다. '질러肉PHO'는 육포와

MZ세대 겨냥 '편 마케팅' 잇따라 빙그레 '멘붕어싸만코' 한정판매 단킨, 30인분 커피잔 가상 출시

쌀국수로 구성된 한정 기획팩이다. 국민 육포 질러의 베스트셀러 제품 5종(△부드러운 육포 △크레이지 핫 육포 △직화풍 BBQ △갈라파베큐 육포 △빠다콘쓰)과 티.아시아키친의 쌀국수 키트(△하노이 쌀국수 소스 △라이스누들 쌀국수면)로 구성됐다.

질러는 앞으로도 뛰어난 품질의 제품과 톡톡 튀는 이벤트로 즐거움을 소비하는 편수머를 사로잡을 계획이다.

롯데제과도 조스바와 매론을 합친 '메론 먹은 조스바'를 만우절 기념 한정 상품으로 내놨다. 롯데제과의 아이스바 '조스바' 속에 기존의 딸기 맛 대신 딸론 맛의 아이스 믹스를 넣었다. 200만 개 한정판으로, 만우절을 앞두고 아이스바 마니아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롯데제과는 1983년 출시된 '조스바'가 40여년간 고수해온 오렌지와 딸기 맛의 조합에 처음으로 변화를 준 것만으로도 마니아층엔 반전의 맛과 재미를 줄 수 있어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패션기업도 가세했다. 신원의 패션 브랜드 '마크엠(MARKM)'은 신축년 소의 해를 맞아 프랑스 프리미엄 치즈 브랜드 '래핑카우'와 함께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내놨다. 전혀 다른 업체가 만난 '거짓말 같은 협업'으로 즐거움과 유행함을 가득 담은 것이 특징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 '마크엠 x 래핑카우' 한정판 컬래버레이션 제품은 반팔 티셔츠, 모자, 우산, 에코백, 양말로 구성됐다.

독특한 가상제품들도 잇따라 등장했다. 팔도는 만우절을 맞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틈새 포기김치' 출시 예고를 암시하는 포스팅을 올렸다.

SPC그룹의 단킨은 30인분 거대 커피잔을 2만9700원에 출시한다고 공식 소셜네트워크 계정에 게시했다. 이 역시 만우절에 맞춰 올린 '가짜 제품'으로 단킨의 커피 구독 서비스가 한 달 비용이 2만9700원인 점에 착안해 해당 구독서비스의 30잔(한 달치)을 재치있게 표현한 것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해 '고춧맛 서울우유' 가상 제품을 선보인 데 이어 올해 만우절에는 △로제 떡볶이맛 △두리안 맛 △단근게의 맛 서울우유 3종을 출시한다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소개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SK바사 추락에도 장외시장은 여전히 '유니콘 열풍'

국내 증시 불안 누른 '파상' 기대감·초대어급 IPO들 출격 대기
K-OTC 시가총액 17.8兆 증권플러스 비상장 MAU 25만 명 ↑
거래소 '상장 문턱 낮추기' 예고에 코스피 입성 노리는 기업도

#. 서울 은평구에 사는 새내기 주부 서모 씨(34)는 지난해 지인의 권유로 장외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예·적금이 투자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의 생각은 이때부터 달라졌다.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공모주에 청약해 단숨에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여유자금을 언제든지 뺄 수 있도록 증권사 종합자산관리 계좌(CMA)에 넣어둔다. 또 38커뮤니케이션 같은 비상장 주식정보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찾아 비상장 기업들의 정보를 챙긴다. 서 씨는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면서도 대박의 꿈을 버리지 못했다.

국내 증시가 불안한 장세를 이어가지만 장외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지난해 '파상'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뚝 떨어진 뒤 상승) 행진을 이어간 공모주를 보

며 투자자들의 학습효과가 생긴 데다 올해도 초대어급 공모주가 줄줄이 출격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모 기업에 대한 거품(과열) 지적이 나오면서 장외시장 '묻지마 투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1일 서울거래소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월 가격이 110만 원까지 뛰었다. 최근 1대 20 무상증자 후 애플 주가는 7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크래프톤의 주당 가격은 250만 원이다. 지난해 말만 해도 160만 원대였지만 100만 원 가까이 올랐다. 하반기 상장을 예고한 카카오뱅크는 8만 2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장외시장도 역대급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장외거래시장(K-OTC)은 대표적인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이다. 이날 장외주식 거래시장인 K-OTC의 시가총액은 17조8853억 원에 달한다. 2019년 14조 원 머



물던 시가총액은 지난해 17조 원을 돌파한 뒤 올 1월 19조 원을 넘어이기도 했다.

늘어난 시가총액만큼 거래도 활발하다. 이날 거래대금은 85억5596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3% 뛰었다. 최근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5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애플 등 국내 유니콘 기업들이 상장을 예고하면서 비상장 주식을 선점하려는 수요가 몰려들었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상장 문턱을 낮추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도 마켓컬리 등 유니콘 기업들이 잇따라 해외 증시 상장을 검토하자 거래소

가 유지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이에 거래소는 유니콘 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원할 경우 시장평가 우수 기업의 기술특례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고 맞춤형 상장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장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또 성장형 기업에 적합한 질적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의 기술평가 전문가 참여도 추진한다.

이미 지난달 9일부터 코스피 상장 시 시가총액 6000억 원, 자본요건 2000억 원이라는 요건을 각각 5000억 원, 1500억 원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BBIG(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등 차세대 성장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성장성 중심의 상장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낮아진 문턱에 코스피 시장에 도전하는 유니콘 기업들도 나타날 전망이다. 애플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회사는 적자 탓에 '테슬라 요건(이익미실현기업 상장)' 제도를 활용한 코스닥 상장을 우선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 이후 줄곧 적자를 이어왔지만 2019년 EBITDA(법인세 등 차감 전 영업이익)는 15억8000억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다.

IPO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도. 지난달 22일 애플은 상장 주관사단과 만나 IPO 일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빠르면 4월 예비심사 청구에 나선다는 관측도 나온다. 예비심사 청구부터 승인까지는 보통 2~3개월이 소요된다. 이를 감안할 때 본격적인 공모 절차를 밟는 시점은 6~7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다음달 제주맥주가 수제맥주업계 최초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다.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기업공개(IPO) 일정에 돌입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현대차증권 조직 개편 "디지털 전환 모색"

자산관리 등 소비자보호도 강화

현대차증권이 고객중심의 디지털 전환 및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증권은 고객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리테일과 헬세일로 나뉘어 있던 자산관리 부문을 통합, 채널총괄본부로 재편했다. 이를 통해 개인고객과 법인고객을 아우르는 통합 자산관리가 가능 해졌다.

또한 기존 WM사업부와 상품전략 부문을 채널총괄본부 산하 리테일사업부로 통합, 영업 채널과 상품·전략 조직 간의 시너지 강화를 도모한다.

사업부별로 흩어져있던 디지털 업무를 통합, 자산관리 부문 디지털 업무를 총괄하는 '디지털솔루션실'도 채널총괄본부 리테일사업부 산하에 신설했다. 디지털솔루션실은 디지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추진력 확보를 위해 애자일(Agile) 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대차증권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표이사 직속의 소비자보호실을 신설했다. 이를 통한 독립성 강화로 고객 관점에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선도에 나선다.

한편 추가적으로 운용 조직 전문성 강화와 리서치센터 기능을 확대한다. 전략PI 실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두고 산하에 채권 운용팀을 배치, 자산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 그리고 리서치센터에 글로벌 리서치팀을 신설, 해외주식 투자정보 제공 확대 및 컨설팅 강화를 통해 해외주식투자 서비스 영업 등을 지원한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디지털, 비대면 중심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체계를 구축, 고객에게 신뢰받는 증권사로 지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순익 최대' 증권가, 전산투자엔 인식

코로나 영향 비대면 고객 증가 서버 증설 등 투자 요구되지만 전산운영비 증가 10%에 그쳐

지난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증권사가 전산운영비 증가에는 인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고객이 늘어나면서 서버 증설 등 많은 전산운영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주요 7개 증권사(키움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가 지난해 지출한 전산운영비는 전년보다 9.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7개 증권사의 순이익이 25.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전산운영비의 증가율은 회사의 성장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해 증권사 실적 증가의 주요 요인은 개인투자자였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를 위한 정보기술(IT) 관련 투자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사상 최대 실적'

을 달성하는 분위기 속에서 다른 비용을 크게 늘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서 "주로 실적은 '신용용자'와 같은 수수료수익이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다른 비용을 늘릴 유인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7개 증권사 중 지난해 가장 전산운영비를 크게 늘린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2019년 대비 무려 51% 늘어난 315억 원을 전산운영비에 투자했다.

가장 전산운영비가 조금 늘어난 증권사는 삼성증권이다. 다만 삼성증권은 증권사 중 전산운영비에 가장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증권사이기도 하다. 무려 782억 원을 전산운영비로 쓰고 있다.

순이익 대비 많은 전산운영비를 쓰는 증권사는 대신증권이다. 지난해 147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전산운영비로 25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수익의 9% 가량을 전산운영비로 지출했다.

순이익 증가율 보다 전산운영비 증가율이 높았던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이다. 메리츠 증권은 전산운영비를 전년 보다 9.0% 늘렸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증권사 중에서 순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았지만 전산운영비 증가는 13.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지 기자 eom@

상장사 전·당기 감사인 '불협화음' 속출

지난해 20개사 조정협 개최 6곳 회계법인 간 의견 불일치

전·당기 감사인(회계법인) 간 의견 충돌이 속출하고 있다. 회계개혁의 핵심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감사인(회계법인)이 교체된 데 따른 부작용이다.

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해 '전·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를 연 기업은 모두 20개사다. 이중 조정협을 열고도 감사인 간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한 기업은 다이동일, 광림, 아스텍WB, 장원테크, 포스코케미칼, STX중공업 등으로 나타났다.

조정협은 금융위원회 등이 지난해 1월 감사인 직권 지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로 나타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의견 불일치 사례를 살펴보면 포스코케미칼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안쪽인 1733억 원 규모 '투자일임계약자산' 회계처리 단위를 놓고 이견이 발생했다. 전기 감사인은 전체 계약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보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했으나, 당기 감사인은 개별 구성자산별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봤다.

조정협을 거치면서도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고, 2019년 말 2100억 원이던 현금성 자산은 367억 원으로 수정했다.

다이동일은 당기 감사인이 연결 대상으로 묶었던 '동일드방레'에 대해 실질 지배력이 없다고 보고 이를 연결실체에서 제외했다. 동일드방레는 다이동일이 지분 50%를 보유한 회사다. 나머지 지분은 프랑스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전기감사인인 CEO와 CFO 등 주요 임원을 다이동일에서 선임한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이라고 판단했다.

회사는 당기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 역시 동일드방레를 연결실체에서 제외한 내용으로 사업보고서를 재작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이동일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19년 9000억 원대에서 지난해 6000억 원대로 28%가량 줄어들게 됐다. 영업이익도 47%가량 감소한 것으로 기재됐다.

아스텍WB는 금융상품 평가, 분류 및 리스회계처리 적용 여부에 대해 이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타금융자산을 대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했다. 광림도 종속기업투자 주식 손상 평가 목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시가 외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전·당기 감사인 의견이 갈렸다.

박기영 기자 pgy@

신한금융 조직개편·인사 단행

신한금융투자는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및 자산관리 고도화와 GIB그룹 ECM/DCM의 전통적 IB영역을 강화하는 전략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 및

인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PS본부 내에 WM리서치부와 포트폴리오 전략부를 신설했다.

WM리서치부는 글로벌 자산배분전략

수립, 자산관리 투자 아젠다 생산 및 투자 콘텐트를 제공한다.

포트폴리오전략부는 모델 포트폴리오 제공 및 운용, 모델 포트폴리오 성과 리뷰 및 사내외 자문을 제공한다.

설경진 기자 skj78@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1년 4월 1일 17:00, KST)

전일 대비 1,333,000원 (1.9%▲) | 6개월 대비 53,495,633원 (300.1%▲)

전일 대비 152,000원 (7.0%▲) | 6개월 대비 1,801,495원 (338.3%▲)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653,500	30,500 (4.9%▲)	이오스	5,950	920 (18.3%▲)
리플	691	29 (4.4%▲)	트론	104	19 (22.4%▲)
라이트코인	239,400	7,300 (3.1%▲)	스텔라루멘	498	29 (6.2%▲)
에이다	1,445	17 (1.2%▲)	비트코인에스비	267,000	18,000 (7.2%▲)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뉴타운 무산 딛고 공공재개발·가로주택사업 장위동 '미니 신도시' 기대감

'각자도생' 나선 지정해제 구역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이 구역별로 개발 활로 찾기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구역 해제와 난개발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이 일대는 최근 가로주택사업과 '공공재개발' (공공 참여형 재개발) 등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한 때 서울 최대 규모의 뉴타운으로 꼽혔던 장위뉴타운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도심 속 미니 신도시급 신형 주거타운이 탄생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한창 8·9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탈락한 11·12구역도 재도전 의지 15구역은 '해제 무효 소송' 승소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북구 장위동 장위뉴타운 13-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지난달 4일 시공사 선정에 위한 두 번째 공고에 나섰다. 1차 입찰 당시 건설사 1곳만이 단독으로 입찰에 나서 유찰되자 두 번째로 시공사 선정에 들어갔다.

13-4구역을 포함한 13구역은 장위뉴타운 안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현재 9개 구역으로 나뉘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2014년 구역 해제 이후 신축 빌라가 우후죽순 생겨난 난개발이 빠르게 진행됐다. 하지만 신축 빌라 건립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후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조합원 110명 규모의 13-4구역은 13구역에서도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 개발이 완료되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개발 현황

1구역	레이안장위포레카운티 입주
2구역	꿈의숲코오롱하늘채 입주
3구역	조합설립인가
4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5구역	레이안장위퍼스트하이 입주
6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7구역	꿈의숲아이파크
10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14구역	조합설립인가
8구역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지정
9구역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지정
11, 12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13구역	1-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15구역	민간 재개발 사업 조합설립 추진

※ 8, 9, 11, 12, 13, 15구역은 정비해제구역

면이 구역엔 239가구 규모의 소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장위뉴타운은 2005년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으로 지정된 뒤 15곳으로 나뉘어 정비사업이 추진됐다. 지정 당시만 해도 서울 최대 규모의 뉴타운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지만 개발은 두 동강 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 경기가 꺾이자 2014년 장위12구역 시작으로 줄줄이 개발이 좌초됐다. 장위8·9·11·13구역은 물론 2018년엔 장위15구역도 사업을 접었다. 15곳 중 1·2·3·4·5·6·7·10·14구역 등 9곳에서만 사업이 계속 추진됐던 것이다.

장위13구역 등 정비구역 해제로 개발이 울스톱됐던 6곳은 최근 들어 개발 활로 찾

기에 분주하다. 장위동 A공인 측은 "재개발에 성공한 다른 구역들의 집값 상승과 주거 여건 개선 등을 보면서 해제된 구역의 주민들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다"며 "현재 13구역에선 13-6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 총회를 마쳤고, 13-8구역도 가로주택사업 동의를 70%를 넘겼다"고 전했다.

장위8·9구역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에 이름을 올렸다. 8구역 (11만6402㎡)과 9구역 (8만5878㎡)엔 각각 23877가구와 230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이들 2개 구역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중에서도 규모 1, 2위에 오른 '핵심 사업지'로 꼽힌다.

장위11·12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가 워낙 강해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새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전망이다.

장위15구역도 재개발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역 해제 무효소송에서 최근 최종 승소하면서 사업 재추진 길이 열렸다. 15구역은 당초 2464가구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던 곳이다. 하지만 구역 해제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일부 구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어서 뉴타운 재개발을 위한 조합이 새로 설립되면 개발이 양적으로 나날 가능성도 있다.

공공재개발로 지정되거나 추진 중인 4개 구역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 여파로 공공의 신뢰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서 얼마나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지 선정은 주민 동의를 얻어서 진행된 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와 구청, 지역구 의원이 '짬짜미' 선정한 겁니다. 앞으로 중산4구역은 15년 이상 분쟁지역으로 남을 게 뻔합니다."

-서울 은평구 중산4구역 인근 G공인 관계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 첫발도 떼기 전 곳곳 '파열음'

정부가 2·4 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차 후보지를 공개했지만 후보지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지역 내 부동산 관계자와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주민 동의' 없는 후보지 지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던 곳을 일방적으로 후보지로 선정한 곳에 선 주민 반발심이 커지고 있다. 사업을 주관해야 할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공직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주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

으로 선정해야 주민 호응도가 높을텐데 정작 이곳은 방치하고 다른 곳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신길동 B공인중개 관계자는 "(신길 2·4·15구역은)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최근에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공공 개발이 진행되면 반발도 심할 것이고 주민 동의를 얻는 일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신길4구역 인근 H공인 관계자는 "신길4구역이 후보지에 들어갔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고 황당하다"며 "동네 사람들은 '공공'자 들어간 건 무조건 안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미 민간개발 추진했는데"
중산4 등 주민들 거센 반발
공공 주도 개발 거부감 심해
'주민 동의' 절차 난항 예고**

1일 업계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대부분은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저층주거지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로 선정된 은평구 중산4구역 내 G공인 관계자는 "민간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이 많은데 공공 주도로 개발한다고 해 개인 주택이나 상가를 갖고있는 분들이 화가 많이 났다"며 "중산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찬성한다고 하는데, 이쪽은 구청과 LH 등과 손잡은 일부 세력일 뿐이다"라고 했다.

역세권과 저층주거지로 공공 주도 개발 후보지로 대거 선정된 영등포구 일대 주민 민심도 들끓고 있다. 영등포역 인근 R공인 관계자는 "이번에 신길2·4·15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는데 정작 이 지역은 민간 재개발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곳"이라며 "차라리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다 탈락한 신길16구역을 사업

정부가 공공주도 개발 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역 주민은 모르고 있거나 '공공재개발' (공공참여형 재개발) 등 다른 사업과 헷갈리는 경우도 많다.

준공업지대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도봉구 창2동 인근 J공인중개 관계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선정됐는지도 몰랐고 앞에 '공공'자 붙은 게 워낙 많다 보니 그 사업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며 "이곳은 공공 주도 개발에 관심이 없는 지역이라 아마 주민 동의를 얻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창역 도시와공간 대표는 "정부가 지역 주민과 먼저 소통한 뒤 후보지역을 발표한 게 아니라 지자체와 협의 후 하향식으로 통보한 만큼 시간이 갈수록 정책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대출 옥죄기'에 주담대 증가폭 꺾였다

3월 주담대 잔액 482조...전월 대비 절반 그쳐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매수 심리 주춤 "금리 상승 등 당분간 현수준 증가폭 유지 전망"

지난달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 증가폭이 두 달 만에 줄었다. 정부의 '대출 조이기'로 대출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 발표로 주택 매수 심리가 한풀 꺾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시장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고 대출 금리도 계속 오르는 만큼 당분간 주담대 잔액은 현재 수준의 증가폭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3월 26일 기준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총 482조30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월 말(480조1337억 원)보다 0.45%(2조1716억 원) 늘어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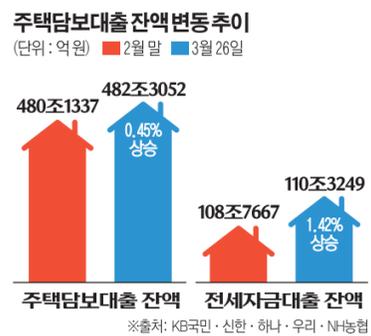
하지만 지난달 주담대 잔액 증가폭을 보면 2월 대비 많이 줄었다. 2월 말 주담대 잔액은 전월 대비 0.79%(3조77658억 원) 늘었다. 지난달 잔액 증가폭(0.45%)은 2월 대비 비교하면 약 43%가량 줄어든 셈이다. 지난 1월 말 증가폭

(0.55%)과 비교해도 지난달 증가폭 감소세는 눈에 띌 정도다.

전세대출 역시 증가폭이 줄었다. 지난달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총 110조3249억 원으로 전월(108조7667억 원) 대비 1.42%(1조5582억 원) 늘었다. 2월 전세자금대출 증가폭은 1.92%(2조491억 원) 수준이었다.

주담대 잔액 증가폭 감소의 직접 원인은 금융당국의 대출 축소 정책 때문이다. 올해 들어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집값과 전셋값 상승 영향으로 꾸준히 늘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주택 관련 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지난달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등이 잇따라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대출 문턱 높이에 나섰다.

아울러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발표로 최근 주택 매수심리가 약세를 보이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4.1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월 넷째 주 2·4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처음 하락해 109.8을 기록한 이후 지난주까지 6주 연속 내렸다.

매매수급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주담대 잔액 증가폭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전망도 많다. 윤지혜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면서 주담대 잔액 증가폭도 줄어든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거래량 수준보다 더 줄어든 건 어렵고 다른 영향 요인도 없기 때문에 주담대 잔액 증가폭은 현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서울 아파트 전셋값 '진정세'

'마포' -0.01% 90주 만에 하락 '강남' -0.02% 2주 연속 내림세 '노원' 0.1% '성북' 0.07% 올라

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세가 강박으로 번졌다. 지난주 강남구가 45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한 데 이어 이번엔 마포구도 내림세로 돌아섰다. 신규 입주 물량 여파에다가 고가 아파트 전세를 중심으로 매물이 쌓인 영향으로 보인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오르며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1%)이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서울(0.04%→0.03%)과 지방(0.17%→0.16%)은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에선 마포구가 신규 입주 물량 증가 영향으로 0.01% 하락했다. 2019년 7월 둘째 주 이후 90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강남구(-0.02%)는 두 주 연속 떨어졌고, 강동구(-0.02%)도 신규 입주 물량 여파로 작년 2월 둘째 주 이후 59주 만에 하락

했다. 지난주 하락(-0.01%)했던 송파구는 이번주 보합(0.0%)을 기록했다. 반면 노원구(0.10%)와 성북구(0.07%) 등의 전셋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서울 전세시장에선 그간 가격 급등의 피로감과 계절적 비수기, 매물 누적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산하고 있다"며 "강남구에 이어 마포·강동구 등도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서울 전체 상승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선 인천이 0.25%→0.27%로 전셋값 상승폭을 키웠다. 경기도는 0.13%→0.12%로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에선 대전(0.33%), 울산(0.23%), 충남(0.23%), 제주(0.21%), 대구(0.20%), 강원(0.18%), 충북(0.15%), 부산(0.14%), 경남(0.12%) 등에서 상승세가 지속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주 0.24% 오르며 전주 상승률을 유지했다. 수도권(0.29%→0.28%)과 서울(0.06%→0.05%)은 상승폭이 줄었고, 지방(0.19%)은 전주와 같았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유치제안서 제출

서울시 “스포츠 통해 한반도 평화·화합 비전 담아” IOC의 브리즈번 우선 협상지 선정에 유감 표명

서울시가 2032년 하계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제안서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미래유치위원회에 1일 제출했다.

서울시는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의 비전을 ‘경계와 한계를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Beyond the Line, Toward the Future)로 정하고 5대 분야별 콘셉트를 담은 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다.

5대 분야별 콘셉트는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파괴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로 모두가 함께 하는 올림픽 △남북이 연결되고 동서가 화합해 평화를 이루는 올림픽 △첨단기술과

K-컬처를 통해 세계가 향유하는 올림픽 △연대와 포용, 선수 인권이 존중되는 올림픽이다.

특히 서울시는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 실현이라는 IOC의 비전과 대회개최가 가져올 다양한 긍정적 파급 효과를 설명함으로써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서울-평양 올림픽 개최를 매개로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 실현이라는 IOC 비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향한 정부의 오랜 염원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점 등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서울시는 IOC가 지난 2월 호주 브리즈번을 2032년 올림픽 우선 협상지로 기습 선정함에 유감을 표명하고 IOC 측과 협의를 진행해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제안서를 제출했다.

IOC는 지난 2월 25일(한국시간) 집행위원회를 열어 브리즈번을 우선 협상지로 결정한 하계올림픽 미래유치위원회의 권고를 승인했다.

서울시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미래유치위원회가 우선 협상지 지정이 아니므로 다른 경쟁 도시들에 협의를 계속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개장 서울 낮 최고기온이 26도를 기록하는 등 5월 중하순의 날씨를 보인 1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에서 봄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며 즐거워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해 일부 노후 놀이시설물을 철거하고, 올해 초 공개경쟁입찰로 새 운영사를 선정하면서 이날 놀이동산 재개장에 들어갔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명수, 새 대법관에 천대엽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5월 퇴임하는 박상욱 대법관 후임으로 천대엽(사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를 선정했다. 천 판사가 임명되면 대법원 재판부는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1일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봉옥 전 대검 차장(사법연수원 19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등 3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를 공개하고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1995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면서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약 26년 동안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24일 공개된 고위법관 재산 현황에 따르면 천 후보자의 재산은 2억 7300만 원으로 공개 대상 고위법관 144명 중 가장 적었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이면 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인준 절차가 시작된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월성원전 자료 대량삭제 혐의 산업부 공무원 2명 보석 석방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한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 씨와 서기관 B 씨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이다.

A 씨는 2019년 12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C 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 들은 B 씨는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을 삭제한 혐의가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1심 징역 5년

동승자는 방조혐의만 인정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지희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다가 이른바 ‘운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이 같이 적용돼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 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B 씨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차량을 제공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를 통해 3억6000만 원 상당을 지급했고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 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 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회사 법인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B 씨가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보고 A 씨와 함께 ‘운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재미 공감 통격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미지의 세상, 삶의 자극제... 매번 새 인생 펼쳐지죠

여행작가 채지영

해외여행이 낯설었던 1990년대 초반, 대학생 신분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와서 쓴 책 '유럽 일기'를 시작으로 여행작가 채지영(51)은 세계 일주 1세대로 불리며 세계 곳곳을 누볐다. 솔한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책, 강연과 연재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여행의 매력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그녀가 2016년 이후 5년 만에 그간의 여행을 정리하며 써 내려간 신간 '여행이 멈춰도 사랑은 남는다'로 돌아왔다.

신간은 지난 5년의 공백을 설명하는 주석과 같은 여행기다. 잊지 못할 여행의 순간부터 여행지에서 수집해온 영수증, 낱고 자석, 인형 등과 관련된 사연, 아버지와의 추억, 여행에서 마주친 사람과의 대화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녀에게 지난 5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지난 5년은 참 다사다난했어요. 좋았던 순간도 있었지만 괴로웠던 시간도 많았어요. 평생을 함께할 짝궁이 생겨서 좋았지만,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아파서 큰 수술을 받기도 했어요. 틈날 때마다 여러 군데에서 강의도 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의뢰받은 원고를 쓰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다녀온 여행을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출장이 줄어들면서, 지난 여행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이번에 책을 내게 됐어요."

지난해는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혔다. 실제로 2020년은 1994년부터 매해 해외로 떠났던 그녀가 유일하게 해외를 못 나간 해라고 한다. 대신 새로운 여행의 맛을 알게 됐다고.

"작년은 국내 여행의 재발견이라 부르고 싶어요. 예전과 달리 깊게 국내 여행을 다녔어요. 물론 해외를 못 나가서 아쉬웠지만요. 사실 그동안 국내 여행은 일로 가거나, 가끔 부모님과 함께 가는 효도 여행이 전부였던 탓에 즐길 새가 별로 없었어요. 이번엔 일주일이나 한 달씩 진득하게 한곳에 머무는 방식의 여행을 했는데, 참 새로웠어요. 이렇게 조금 느긋한 여행을 하면서 마음의 여유도 찾고, 스스로 돌아켜보는 시간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코로나에 하늘길 막힌 작년 국내 깊게 돌아볼 수 있었죠
학생때 세계일주 하고나니 여행에 대한 갈증 더 커져
전국 맛집 이름 꿰던 아버지 ‘여행 유전자’ 그대로 옮겨와
세계 돌아다니며 공수한 인형 앨범 같아 더 신중하게 고르죠

여행 유전자와 귀여운 앨범

1994년 대학생 신분으로 떠났던 배낭여행은 그녀를 세계 일주 1세대로 이끌었고, 세계 일주의 경험은 어엿한 여행작가의 길로 가게 했다. 도대체 여행의 어떤 매력에 매료된 것일까?

"6개월이나 1년씩 긴 여행을 떠나던 유럽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서 긴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세계 일주를 하면 여행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 하고 나니 더 하고 싶더군요. 제일 무서운 맛이 아는 맛이라는 것, 그때 깨달았어요. (웃음) 생각해보면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우쿨렐레나 카타칼리 메이크업처럼 평소엔 배우지 못했던 것도 배워보고, 다양한 문화나 종교를 접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제 삶에 끊임없이 좋은 자극을 불어넣어 준 것 같아요."

사실 그녀에게 여행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유년 시절 매년 여름이면 친척들끼리 모여서 야외로 캠핑 가는 것은 기본이고, 한번은 외갓집 식구들과 함께 45인승 버스를 빌려서 전국을 유랑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진짜 여행을 좋아하셨어요. 신문잡지 레저면에서 소개하는 여행 기사를 전부 스크랩하셨어요. 어찌나 열심히 하셨던지 스크랩북을 보지 않고도 전국 여행지 맛집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할 정도로 줄줄 꿰고 계셨어요. 여행지에 가면 '종'이나 '배지' 같은 걸 꼭 사서 돌아오셨는데, 제가 인형이나 낱고 자석을 수집하는 것도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일종의 여행 유전자라고 할까요?"

실제로 낱고 자석은 낱고의 옆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고, 그녀의 작업실은 인형의 방이라 불려도 될 만큼 세계 각지에서 공수한 인형으로 꽉 차 있었다. 아무리 유전자라고 해도 이토록 열심히 수집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인형처럼 귀여운 걸 좋아했어요. 크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제 공간이 생긴 후로는 더 열심히 모으게 되더라고요. (웃음) 인형을 살 때는 좋은데 돌아올 때는 짐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골라요. 집에 있는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릴지도 살펴보고요. 점점 귀엽고 좋아서 샀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이게 앨범 같아요. 예전에 좋아하던 노래를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나는 것처럼, 인형을 보면 그 여행지의 순간을 다시 곱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새로운 무대의 출발, 책방

여행은 일종의 모험이지만, 이방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외롭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었을 터. 오랫동안 여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행하면서 도둑맞아 빈털터리가 된 적도 있고 여자로서 불편한 경험도 있었지만, 여행을 때놓고 제 삶을 말할 수 없게 됐어요. 같은 시간이라도 여행지와 일상에서 받는 느낌은 달라요. 한번 여행을 떠나면 다른 인생을 산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어진 배역을 통해서 다른 삶을 체험하는 배우와 비슷해요. 다만 여행은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동화 속으로 들어가서 주인공도 만나보고, 주인공이 처한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를 같이 보는 느낌이에요. 말하자면 살아 있는 책이라고 할까요?"

여행작가를 배우로 비유했을 때, 그녀가 목표로 하는 다음 무대는 어디일지 궁금해서 살포시 물어봤다.

"일단 작년에 4개월 정도 머문 동해에 관한 얘기랑 신혼여행기를 늦기 전에 정리하고 싶어요. 최근에는 동네 책방에 흥미가 생겨서 관련된 서적을 탐독 중인데, 앞서 말한 작업이 정리되면 여행과 관련된 책방을 만드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싶어요. 책방 주인이 새로운 무대의 출발이 될 것 같아요."

그녀에게는 여행이 곧 삶이었고, 삶이 여행 그 자체였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미지의 세계로 떠나서,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며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고, 인형을 수집하며 그 추억을 오래도록 마음에 새겼다. 여행에 대한 열정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컸고, 늘 새로움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새로 적은 버킷리스트는 여행을 통해 하나씩 지워갔다. 동시에 일상과 잠시 거리를 둔 채 스스로 성찰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다짐했다. 앞으로도 그녀의 삶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이 끝내 바다에 닿듯 결국 여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언젠가 그녀가 운영하는 여행 책방에서 여행 자들과 함께 이야기꽃을 활짝 피우는 날을 기대하며 마친다.

글/금민수 기자 minsugold@ 사진/오병돈 프리랜서 obdlife@gmail.com



Dr. Different



“갤럭시 스테이지, 언택트 시대 팬 취향 저격”

삼성전자 한국총괄 IMC팀 김지은 프로

5개 테마 생중계, 이날치·릴보이 협업 ‘뮤직’ 특히 인기 기존 형식 벗어나 비대면 마케팅 새로운 기준 제시 평가

‘조회수 약 7300만 회, 동시 접속자 17만 명, 순시청자 176만 명’

삼성전자가 언택트(Untact) 시대를 맞아 새롭게 시도한 ‘갤럭시 스테이지’의 기록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갤럭시 S21’을 출시하면서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넘어 다양한 문화 코드를 담아 5개 테마로 구성된 갤럭시 스테이지를 처음 선보였다. 갤럭시 매 스테이지는 열광적인 환호를 끌어내며, 비대면·언택트 마케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갤럭시 스테이지를 준비한 삼성전자 한국총괄 IMC팀 김지은(사진) 프로는 “올해는 언택트 시대에 맞춰 팬들에게 일상의 활력을 전달하면서도 갤럭시만의 특별한 감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갤럭시 스테이지’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갤럭시 스테이지는 총 5회에 걸쳐 생중계된 엔터테인먼트, 뮤직, 패션, 아트, 필름 등의 테마가 모두 인기를 끌었지만, 그 중에서도 ‘뮤직 스테이지’가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김 프로는 “힙(Hip)’의 정점에 있는 얼터너티브 팝 밴드 이날치와 래퍼 릴보이의 이색적인 협업이 주효했다”며 “국악과 랩의 환상적인 조화로 완성한 멜로디, 갤럭시 S21의 특징점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가사까지 모든 부분에서 팬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제품 출시와 함께 쿠키쇼, 제품 기능 소개, 언박싱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팬들과 소통해왔다. 갤럭시 스테이지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성공적이었던 아이템들을 하나로 융합해 콘텐츠의 임팩트를 극대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다. 대면 마케팅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기존의 형식을 벗어난 새로운 접근과 차별화된 방식을 찾아

야 했다. 김 프로는 “비대면의 한계 속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NBDB(Never Been Done Before) 마케팅의 이정표를 또 한번 넘어서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콘셉트부터 채널까지 기존의 마케팅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했다”며 “영상을 넘어선 2차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 다양한 접점에서 소통했고, 방송사 유튜브, 옥외 광고, 온라인 편집숍 등 갤럭시 스테이지의 콘텐츠를 새로운 미디어에서 선보인 것도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말했다.

김 프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스마트폰 마케팅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을 한 차원 더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어 김 프로는 “지금은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팬들과 만나고 있지만, 예전처럼 외부 활동이나 대면 접촉이 자유로워지면 얼마든지 오프라인으로 다시 확장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김세종 산업기술시험원장 취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김세종 KTL 신임 원장이 1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세종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3월 31일까지다.



김세종 신임 원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중앙대 물리학과를 나와 프랑스 그르노블 대학원 응용물리·재료공학 석사, 프랑스 파리 슈드 대학원 고체물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안재용 SK바사 대표 사장 승진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가 1일 자로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안재용 사장은 2018년 7월 SK바이오사이언스 출범과 함께 대표로 취임해 회사의 사업구조 혁신과 글로벌 사업 확장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 사장은 1998년 SK케미칼 입사 후 SK건설 경영지원담당, SK가스 경영관리실장 등 그룹 내 주요 보직을 거쳤고, SK케미칼 LS 전략기획실장과 VAX사업부 문장에 이어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박미선 기자 only@

SGA, 김신환 대표이사 선임

종합 IT기업 SGA가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김신환 사업총괄 사장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국내외 IT솔루션 회사 등의 사업 본부장을 거쳐 2008년 SGA 그룹에 합류했다. 이후 SGA솔루션즈 등 그룹 내 계열사의 기술, 영업, 사업 관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뒤 올 초 SGA 사업총괄 사장을 맡으며 SGA 그룹의 성장에 기여해왔다. 최영희 기자 che@

보성산업 대표이사에 김대근 사장

보성산업이 1일 신임 대표이사로 현대건설 출신인 김대근 전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장을 선임했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국내외 건설 및 사업관리, 영업부서 등을 거치며 홍보실장, 법무실장을 역임했다. 지난해부터 현대건설 투자법인인 송도랜드마크시티 대표이사를 맡는 등 약 30여 년간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 개발 및 운영사업의 주요직을 두루 경험한 부동산개발 전문가다. 이재영 기자 lly0403@

부음

- ▲윤정애 씨 별세, 김동혁(청주CBS 본부장) 씨 모친상 = 1일, 경기 광명성애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3일 오전 8시, 070-4906-5449
- ▲김현순 씨 별세, 윤한홍(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 씨 모친상 = 31일, 창원한마음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특실, 발인 3일 오전 8시 30분, 055-225-1200
- ▲권오병 씨 별세, 이선근(골프매거진 코리아 대표이사) 씨 장인상 = 31일,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일 오후 1시, 02-431-4400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건강검진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협약

CJ대한통운은 전국에 있는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택배기사 건강검진을 위한 MOU’ 체결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건강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위탁을 받아 직종별로 유해 요인 파악, 전문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MOU 체결을 완료한 CJ대한통운은 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한 건강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CJ대한통운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발표한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 이행의 일환이다. 앞으로 전국에 있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매년 뇌심혈관계 항목이 추가된 건강검진은 물론 전문의료진의 건강상담서비스를 연간 3회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검진과 건강상담 서비스는 택배기사의 편의성을 고려해 전문의료진이 택배기사가 일하는 서버터미널에 직접 방문한다. 건강상담 서비스를 통해 택배기사는 건강검진 기록을 토대로 한 기본적인 건강상담부터 근무환경개선 상담까지 건강과 관련된 포괄적인 전문의료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車 사고원인 못 밝히는 우즈의 사생활은?

LA경찰, 결론내렸다며 ‘본인 허락 필요’...일반인과 형평성 논란

미국 경찰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사진)의 차량 전복 사고 원인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이거 우즈의 사생활 노출 우려에서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현지 언론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알렉스 비야누에바 보안관이 브리핑을 통해 “타이거 우즈의 차 사고 원인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조사가 종결됐다”며 “수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우즈에게 사생활 정보를 포

기할 것인지 물어본 다음에 사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거 우즈는 지난달 23일 LA 인근 롤링힐스 에스테이트의 내리막길 구간에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80 SUV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이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뒤 현재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회복 중이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회수해



조사했지만, 사고 당시 주행 정보에 대해서도 합구했다.

비야누에바 보안관은 “블랙박스에 담긴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사고에 연루된 사람들의 허락 없이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LA 경찰의 정보 비공개 방침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즈가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경찰이 사생활 보호 이유로 공개 여부를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재영 기자 maccam@

롯데건설 사룻데 봉사단, 경기 오산서 주거환경개선 봉사

롯데건설은 사내 봉사단인 사룻데 봉사단이 경기도 오산에서 활동이 어려운 독거 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이번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에는 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 리빙딩 현장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전기배선 공사 및

도배, 장판 교체, 가구 기증, 가옥 내·외부 보수 등 건설업 특성을 살린 재능기부 활동이 이뤄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사룻데 봉사단은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해 도움이 필요한 곳을 꾸준히 찾아 나섰다”며 “앞으로도 건설업 특성을 살린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더 활발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18개 봉사팀으로 시작한 사룻데



봉사단은 올해 4월 기준 83개로 봉사팀이 확대됐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인사

-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혁신정책담당관실 박경훈 △예산기준과 이기훈 △총사업비관리과 김일 △환경에너지제과 김성수 △종합정책과 박필성 △정책기획과 김경록 △정책조정총괄과 허수진 △지역경제정책과 이병익 △국유재산정책과 신동선 △재무경영과 유영섭 △경제협력기획과 최병석 △복권총괄과 이병두 △재정정보공개과 조외영 △기획재정부 박은미
- ◆한국관광공사 ◇전보 △타이베이지사장 이장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프라운영실장 변덕용 △미래전략팀장 김중주 △전북분원 북합소재기술연구소 행정팀장 김휘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보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장 이정삼 △국제수산연구실장 정명화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운금융연구실장 박성화 △항만연구본부 항만운영연구실장 김찬호 △첨단항만연구실장 이연경 △수산정책사업본

- 부수산업관측센터 양식관측연구1팀장 기영 △ 양식관측연구2팀장 노아현 △ 관측모형연구팀장 허수진 △ 대중어 관측연구팀장 조국훈 △경영지원본부 행정지원실장 김혁주 △ 청사관리실장 이병우 △대의협력사업부 IAME2022사무국장 박옥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위원 김문수 박준상 김선재 장재권 황태석 조영식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이인한 △융합본부장 김주선 △경영본부장 김태우 △감사단 감사기획부장 김상중
- ◆금융투자협회 ◇임원 △상무(자율규제본부장) 이봉헌
- ◆코스닥협회 ◇승진 △사업지원본부장 전무 정진교 △연구정책본부장 이사 김준만
- ◆BNK금융그룹 ◇BNK금융지주 △전무 정성재(그룹전략재무부) △구교성(그룹경영지원부/그룹자산관리부) △부산은행 △부행장부 이승재(투자금융

- 그룹/투자금융지원본부) △상임감사위원 조성래 △부행장 명형국(여신운영그룹/여신지원본부) △상무 송상섭(경남·울산 영업본부) △이수찬(투자금융영업본부) ◇경남은행 △부행장부 고영준(경영전략 그룹/경영기획본부) △김영원(고객지원 그룹/여신지원본부) △상무 정용운(투자 금융그룹 직무대행/투자금융지원본부) △박태규(동부영업본부) ◇BNK투자증권 △상무 박창진(투자운용본부)
- ◆라이나생명 ◇상무 승진 △운영심사부 이용수 ◇이사 승진 △대의협력부 장순원 △채널플랫폼개선부 김일정 △경영지원부 박경식 △미디어사업부 석승현 △상품개발1부 최창환 △재무제리부 이수현 △정보기술부 정영규 ◇이사 선임 △New Biz & Service부 이수영 △디지털마케팅 부 이영규
- ◆메트라이프생명 <승진> ◇부사장 △오퍼레이션(Operations) 담당 이상운 <선임> ◇상무 △전략적 제휴(SA) 채널 담당

- 이장록
- ◆하이투자증권 ◇부서장 신규 보임 △법인솔루션부장 정재용
- ◆리딩투자증권 ◇상무 승진 및 보직 △투자금융실장 윤승용 △리스크관리실장 이윤석 △시너지추진실장 이성기 ◇이사 승진 및 보직 △멀티금융팀장 송동현 ◇이사보 승진 및 보직 △준법감시실장 김종은 △구조화금융2팀장 이성민 △투자금융팀장 소현재 △PI팀장 한유건 △멀티에셋팀장 나상훈
- ◆일동제약그룹 ◇일동히알테크 대표이사 이석준 ◇일동홀딩스 △상무이사 김재진 ◇일동제약 △상무이사 김찬호
- ◆한국에브비 △상무 김동욱 최윤희
- ◆몬스터유니온 △대표이사 황의경
- ◆녹색경제신문 △부국장 겸 금융부장 이승재 △유통부장 양현석
- ◆비즈월드뉴스 △취재본부장(국장) 정영일
- ◆뷰어스 △마케팅국 국장 김준영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동서대 객원교수 전 주핀란드 대사

김정은 시대의 시장화 개혁은 선대와 달리 불가역적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시장화의 정도가 깊고 법령까지 개정하여 공식화한 점도 이런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개혁 시도 이후 약 10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의 북한에서는 2007년 김정일 시대의 강한 기시감이 느껴진다. 결국 김정은도 선대와 똑같은 문제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싶다.

김정은의 '경제개혁', 어디로 가고 있나

일반인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알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북한매체 보도들과 국내외 북한 관련 단체들이 내놓는 정보를 종합해 보면 북한에 모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방향은 김정은이 권좌에 오른 이후 추구하던 '개혁적'인 경제정책들이 후퇴하는 듯한 인상이 짙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부터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그 결과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비교적 최근에 입수된 북한 법령집에 포함된 인민경제계획법, 기업소법과 같은 경제 관련 법령들의 개정 내용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들은 국가계획의 범위를 축소하고, 경제 단위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시장과 가격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지난 세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도했던 '시장사회주의' 개혁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에 '개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크게 빗나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내에서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북한경

제 2016년 3.9%의 성장을 보였다. 근래에 보기 드문 성장이었다. 무엇이 그런 성장을 가능하게 했는지 정확한 분석은 쉽지 않지만 김정은의 새로운 경제정책이 효과를 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2017년부터는 다시 마이너스 또는 미미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17년부터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제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 제재 완화를 기대했지만 협상이 노딜로 끝남으로써 당분간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은 멀어졌다. 이제 북한은 제재가 상수인 상태에서 경제를 꾸려나가기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경제가 제재, 수해, 국경폐쇄로 인해 삼중고를 겪고 있고 이리다가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와 같은 경제난이 닥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시장경제가 주민들의 소득과 소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경제가 위기에 빠지더라도 고난의 행군 같은 경제위기가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꽤 일리 있는 것처럼 들린다. 그래서 북한이 작금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더욱 시장화

쪽으로 밀고 나갈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 초에 나온 노동당 회의 관련 북한매체의 보도에는 개혁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만한 언어들 나오지 않았다. 김정은 시대의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유통, 물류 부문의 자율성 확대였다는 점에서 국영 상업망 복구의 강조도 고개가 가우뿔겨러지는 대목이다. 또 하나의 불길한 징후는 작년 하반기에 나온 달러화에 대한 북한 원화의 평가절상 소식이다. 원인에 대해서는 당국이 외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철저히 단속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정확한 내막을 알기는 어렵지만 사용이 불가능해진 달러가 시장에 대량으로 풀려 가치가 하락하면 주민들의 손에 있는 달러를 싹쓸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2009년 김정일 시대의 화폐개혁과 비슷한 의도로 보인다.

사회주의 경제가 개혁을 추구하면 중국에는 소유권, 사유재산의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가 돈을 더 별면 개인의

재산도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는 부쩍 반사회주의 투쟁을 다짐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실제로 3월 14일자 노동신문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확립과 부르주아 사상문화의 침습 저지를 위한 전사회적, 전대중적 투쟁을 외치고 있다. 김정일 시대에도 2000년대 초반 개혁의 방향으로 나가다가 2006년을 지나면서부터 '활성바람' 운운하면서 역주행을 한 적이 있다. 김정은 시대의 시장화 개혁은 선대와 달리 불가역적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개혁 시도 이후 약 10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의 북한에서는 2007년 김정일 시대의 강한 기시감이 느껴진다. 결국 김정은도 선대와 똑같은 문제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싶다. 시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재산축적의 공간이다. 21세기까지 이어지는 전체주의적 체제의 비결은 주민들의 영혼을 빼앗는 사상교양과 총화, 그리고 주민들의 밭그릇과 구들장을 수렁이 주고 뺏는 소유권 통제라는 두 축이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도 개혁정책으로 경제가 조금 나아지면 다시 철퇴를 내릴 수밖에 없는 역사가 반복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윤기영의 미래토크



한국외국어대 경영학부 미래학 겸임교수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급등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등의 급격한 양적완화를 들고 있다. 디지털화폐의 발행에 따라 지하경제가 암호화폐로 이탈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공적인 국가와 사적인 글로벌기업과 개인의 화폐시스템을 둘러싼 투쟁으로 보아야 한다. 화폐전쟁 1.0이 국가 간 기축 통화에 대한 전쟁이라면, 화폐전쟁 2.0은 공적 조직과 글로벌화된 사적 조직 사이의 화폐시스템에 대한 전쟁이라 할 수 있다. 화폐전쟁 2.0은 블록체인 기술의 출현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를 디지털 전환 차원에서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그 의미가 매우 풍부하다. 사용자 경험, 업무 절차,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정책 모델·비즈니스 전략, 조직 문화,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전환 모두 디지털 전환으

근본적 전환을 준비하라

로 정의된다. 이들 정의는 상충하지 않는다. 이들은 시간을 축으로 디지털 전환의 성숙 단계로 보아야 한다.

화폐전쟁 2.0 이외에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에 따른 메타버스, 디지털 의료와 정밀 의료의 발달, 저궤도 위성 인터넷의 발달 등도 근본적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이들은 서로 융합하고 결합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후위기와 미·중의 헤게모니 전쟁과 같은 극단적 사건(X Event)은 코로나19가 그러했듯이 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다.

산업혁명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의 증가와 이로 인한 생산성 증가를 가져온 데 그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노예제는 철폐되고 공장식 교육제도가 채택되었으며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했다. 산업혁명은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했다. 디지털 전환은 슈바이머 말한 4차 산업혁명과 이음동의어이나, 산업혁명의 아류가 아니다.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혁명이며, 산업혁명보다 더 큰 충

격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것이 증기기관 발명 후 100년이 지나서였는데,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2040년 즈음에 도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21세기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20년간 적어도 두 건 이상의 극단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040년까지는 디지털 기술도 충분히 성숙할 것이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은 충분히 발달할 것이고, 의료용 사물통신 기술의 진보와 인공구조의 변화로 디지털 의료는 대중화될 것이다. 화폐전쟁 2.0의 진전은 에너지 효율적이며 거래 속도가 빠른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을 등장하게 할 것이다. 저궤도 위성 기반 인터넷은 저개발국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2차 자스민 혁명과 사회갈등 및 출산율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 대다수 기업은 디지털 전환에 대해 사용자 경험이나 로봇 프로세스 자동

화(RPA) 정도의 준비를 해 왔다. 디지털 전환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려 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으나, 이들 기술의 개념과 한계 및 쓰임새를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디지털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는 임원진의 디지털 적응도가 낮은 것이 이유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더 이상 안전지대에 숨을 수 없게 되었다. 현실세계의 전환에 나가기 전에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수립은 사고실험에 해당한다. 보다 과감하게 근본적 전환이 이뤄질 것을 가정하고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기업은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정부는 예측적 정책을 실행하고, 노동조합은 상생을 고려한다면, 기업은 생각을 바꾸고 내적 역량을 활용하며 외부 전문성을 연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프리츠 쿤켈 명언 "성숙하다는 것은 다가오는 모든 위기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 정신과 의사. 1차 세계대전 외과 의뢰 참전 그는 파편에 상처를 입어 왼팔을 잃었다. 히틀러가 집권하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해 심리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오늘 생을 마감했다. 1889~1956.

☆ 고사성어 / 산고수장(山高水長)

산처럼 높고 물처럼 장구하다는 말. 고결한 사람의 인품이 오래도록 존경받는다는 뜻이다. 송(宋)나라 범중엄(范仲淹)의 '동려군엄선생사당기(桐廬郡嚴先生祠堂記)'에 나온 말이다. 엄 선생은 동한(東漢)을 개국한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의 친구 엄광(嚴光). 광무제가 그에게 벼슬을 내렸으나 받지 않고 부춘산(富春山)에 은거하며 평생을 보냈다. 범중엄이 엄주(嚴州)의 태수가 되자 엄광이 머물렀던 엄주 땅에 그의 강직한 인품과 고결한 뜻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짓고 기문에 남긴 말이다. "구름 긴 산이 푸르고 강물은 깊고 넓다. 선생의 유풍은 산처럼 높고 저 물처럼 장구하리라.[雲山蒼蒼, 江水泱泱, 先生之風, 山高水長]."

☆ 시사상식 / 리터루족

'돌아가다(return)'와 '깡겨루(kangaroo)'족의 합성어. 결혼 후 독립했다가 다시 부모와 재결합해서 사는 자녀 세대를 가리킨다.

☆ 신조어 / 옆그레이드하다

제품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려 했지만 실패해 전보다 성능이 별로 나아진 게 없는 상황을 일컫는 IT 업계 은어.

☆ 유머 / 의리 있는 친구들

남편의 귀가 시간이 매일 늦어지자 의심한 아내가 남편의 친한 다섯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혹시 데크에 있는지요?' 그 날 밤 똑같은 다섯 통의 회신이 바로 왔다. '우리 집에 와 있음. 걱정하지 마세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최근 유통업체 GS리테일에서 '성과급 논란'이 빚어졌다.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놓고 오너를 포함한 경영진은 지난해 수억 원의 '성과급'을 챙겼다"는 게 논란의 요지다.

GS리테일의 한 직원은 회사 내부 게시판에 "저희(일반 직원)와 (지급) 기준이 다르겠지만 상대적 박탈감 어쩔 것이냐"라며 "성과급 해명해 달라"는 글을 남겼고 이 글은 내부에서 일파만파 퍼졌다.

얼핏 SK하이닉스발(發) '성과급 논란'이 유통업계로까지 번진 것으로 보였지만, 취재해 보니 실상은 조금 달랐다. 문제 확산의 원인은 성과급(혹은 격려금) 액수나 지급 여부보다 경영진의 '언어 감수성 부족' 때문인 듯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자수첩



안 경 무 유통바이오부/noglasses@

사장님에게 필요한 '언어 감수성'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 지난해(2020년) 경영진이 받아간 성과급은 2019년 성과를 기반으로 한다. 실제로 2019년 GS리테일 편의점 사업부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늘었다. 또한, 경영진과 일반 직원의 고과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수긍이 간다.

이쉬운 대목은 격려금에 대한 '언어적 설명'이다. 조운성 사장은 "영업이익이 성과급 지급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돼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CEO(오너)께서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하며 내년을 도약하는 의미로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

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황이 어려웠지만 회사가 (시혜를?) 베풀었다"는 뉘앙스로 들리는 건 이분의 전력 때문일까. 조 사장은 지난해 말 "재택(근무)이나 따지는 나약한 구성원은 GS25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발언이 유출돼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당시에도 조 사장은 "현장을 돌면서 임원들이 직접 챙기라는 취지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MZ세대가 조직 구성원으로 진입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고백보다 더 소통하기 어려운 것이 젊은 조직원이라고 한다. 조직의 리더는 성인지·젠더·인권·공정성은 물론 언어까지 모든 부분에 대한 감수성을 갖춰야 할 판이다.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어쩌라, 이들이 회사의 미래인 것을.

이슈&인물

농업·농촌, 살릴 수 있나

이동필 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소멸,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요. 국무위원까지 했지만 고향에서 어머니 모시고 텃밭 가꾸며 노후를 보내고픈 오랜 생각을 실천에 옮겼죠. 죄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서두르느냐는 아내의 말에도 장관 퇴임식 하루 뒤에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경북 의성군 단촌면을 찾아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그의 손이 눈에 들어왔다. 상처투성이에 까맣게 거칠어진 손. 농사일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났다. 2013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역대 최장수 농식품부 장관을 지냈던 그는 이제 수수하고 평범한 시골 노인으로 보였다.



경북 의성군 단촌면으로 귀향한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올해 손수 심은 파를 가꾸는 모습이 영락없는 시골 노인이다. 이혜근 기자 pinvol1973@

힘든 농사일, 밥만 먹으면 굶어떨어져

단촌은 이 전 장관의 고향이다. 40여 년 전 ‘농민이 왜 못사는지 공부해 오겠다’며 집을 나섰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부 장관을 지낸 뒤 귀향했다. 남들이 흔히 생각하는 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이 아닌 직접 농사를 지으며 스스로를 성찰하고 땀을 흘리는 길을 택했다. 이 전 장관은 “텃밭이나 가꾸려 했는데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농닐 수 없어 지금은 밭농사 2000여평, 논농사 800평을 짓는다”며 “주경야독을 하려 했는데 일이 힘들어 밥만 먹으면 굶어떨어진다”고 웃음 지었다.

그가 농사를 시작한 것은 농사꾼 삶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고향을 떠날 때 했던 그의 말처럼 평생 농정 연구와 여러 요직을 거치며 농업농촌을 고민했지만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은 또 달랐다. 이 전 장관은 “정책을 시행하는 당국이 아니라 대상자의 처지에서 농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며 “정책의 취지를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애로 사항을 이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장관 퇴임 이후 그가 5급 공무원인 경북도 정책자문관을 맡은 것도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됐다. 그는 “막상 고향에 와서 빈집과 지친 농민들을 보며 자괴감이 들었다”며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촌에 살다 보니 현실이 너무 절박하다고 느꼈고, 마침 ‘변해야 산다’며 동분서주하는 도지사의 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두 해 정책자문관을 지내는 동안 지인들에게 “5급이 뭐냐, 채신머리없냐”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일주일에 사흘, 텃 밭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민망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이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자문관으로 있으면서 그는 지역특화산업과 6차산업, 청년일자리와 귀농·귀촌, 마을 만들기와 지역개발 등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농촌을 살릴 수 있을지 고민했다. 전문가들과 ‘농촌살리기정책포럼’을 운영하며 2년간 12차례의 정책토론회와 50여 곳의 현장을 방문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귀향하고 농사를 짓고, 지자체와 현장의 농정을 들여다보면서 그가 느낀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험이다. 한때 150여 가구가 살던 그의 고향 마을도 이제는 70가구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가구는 10가구 남짓이다. 이 전 장관은 “어른들만 계시니 어린이 울음소리는 고사하고 겨

모두들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과거 정책에 대한 반성이 우선
솔직한 원인 진단, 대책 세워야**

**귀촌보다 귀농 편향된 정책 문제
농업인 늘리기보다 ‘기술 전업농’
일하며 살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장관 퇴임식 다음날 고향으로
직접 농사지으며 현실 더 실감**

5급 道정책자문관도 2년간 지내

우 버티는 초등학교와 대중교통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지금의 인구라도 유지하려면 더는 젊은이들의 유출을 막고 귀농·귀촌을 활성화해야지만 생각처럼 간단한 일도 아니고 절박함도 부족해 보였다”고 말했다.

귀촌, 400만 베이비부머를 지방으로

한 예로 귀농·귀촌의 가능성을 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정작 농촌에 사는 젊은이들을 현지에 잡아두는 데는 소홀한 것 같다고 느꼈다. 그는 “지방소멸이 절박한 곳일수록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같이 살자는 간곡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승계농에 대한 상속세 감면, 제3자 승계의 귀농 연계 등 디테일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다.

그는 귀농·귀촌 정책의 또 다른 문제는 귀농에 편향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귀농·귀촌인 46만 명의 대부분이 귀촌인이고 귀농인은 겨우 1만여 명에 불과하지만 교육훈련이며 자금지원 등 대부분 정책이 귀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5년간 귀농·귀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귀촌인 가운데 지원받은 사람은 중앙정부의 주택 및 시설 자금 5.2%, 지자체의 정착자금 6.3%, 시설과 농기계 4.6%에 지나지 않고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78.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지금도 농지와 예산 등 자원이나 시장규모에 비해 농가 수가 많은데, 소규모 경작을 하는 농업인을 더 늘려서 여쭙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기 규모를 가진 네덜란드의 농가 인구가 19만 명인 데 비해 우리는 257만 7000명, 세계의 식량장고인 호주(45만 9000명)와 캐나다(30만 9000명), 심지어 미국(230만 1000명)보다 많은 상황

서 무작정 농업인을 더 늘리기보다 기술을 가진 전업농의 경쟁력을 높여야 식량 자급 등 농업 원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귀농정책을 지역농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영세 고령농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귀촌은 도시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점에서 지방소멸대책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수도권에 사는 400만 명이 나 되는 베이비부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개인의 행복한 삶은 물론 천정부지의 아파트값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전 장관은 “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 등이 주도해 범부처적으로 양도세와 1가구 2주택 중과세 등 족쇄를 풀어야 한다”며 “빈집과 일자리정보 제공이나 농촌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 이사회 지원 등 정책수단을 동원하면 귀촌인들이 편한 마음으로 지방으로 옮겨가 국토를 넓게 써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정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이 전 장관은 “농촌소멸을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농촌이 소멸을 자초하게 된 원인을 솔직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이가 가정 꾸리고 살 수 있게

결국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젊은이들이 현지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가정을 꾸려 즐겁게 살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중앙정부의 부서별로 각기 추진하는 산업과 생활환경, 사람 관련 정책을 서로 연계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해서 일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에 부족한 것이 재정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일하는 방식이고 특화된 지역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기초가 정보와 사람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묻자 그는 다산 정약용이 말한 ‘청복(淸福)’을 누리고 싶다고 한다. 듣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무너지는 지방과 농촌의 파수꾼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는 전하겠단다. 이 전 장관은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학생이 적어 놀랐고, 주민들조차 학교가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문제로 여기지 않아 더욱 놀랐다”며 “지방소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근 기자 pinvol1973@

시설

여당의 정책 뒤집기에 ‘내집 국가책임’...어이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주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국민의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공공주택 재개발·재건축에 민간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줄곧 강화해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실수요자에 대해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주택자 불만이 큰 공시가격 인상률의 조정도 언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4·7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기존 부동산정책을 뒤집는 발언들이 쏟아진다. 여당 후보 지지율이 크게 밀리면서 다급한 상황에 몰린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 대책은 많다”고 했던 여권이다. 부작용과 실패에 대한 시장의 수없는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정책과 규제들을 밀어붙여 왔다. 재건축과 거래를 막고 대출을 제한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대폭 올렸다. 임대차 가격 인상을까지 정부가 정했다. 그 결과가 주택공급 부족, 집값·전셋값 폭등, 영망이 된 시장이다. 무주택자들

의 내집마련 꿈은 갈수록 멀어지고 고통만 커졌다.

민심의 이반이 심각해지자 이제사 자신들이 쏟아낸 정책들을 되돌린다고 스스로를 부정한다. 이런 약속에 무슨 진정성이 있을 건가. 여당은 작년 4·15 총선 때에도 1주택 실수요자들의 중부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선거에서 이기자 결국 없던 일로 내던져졌다. 선거 때 잠시 자세를 낮췄다가 얼굴을 바꾼 기만 행위다.

얼마나 다급해졌는지, 이낙연 위원장이 국민 주거도 국가가 떠맡는 ‘내집마련 국가책임제’까지 들고나온 데 이르렀다. 솔직히 어이가 없다. 그 의미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실현 방도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50년 만기 모기지대출 국가보증제’ 추진을 제시했지만, 결국 국가재정으로 개인의 집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발상이다. 이 나라 민주정치와 시장경제 체제에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도무지 가늠되지 않는다. 마구잡이로 아무 말이나 던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장 위기를 넘기고 보자는 식에 급급할 게 아니다. 여권은 국정의 책임자다. 진정 부동산정책을 반성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며, 또 국민의 고통을 헤아린다면 그동안의 정책 모두를 완전히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어떻게 바꾸겠다는 구체적 행동계획부터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정권 임기 동안 기대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다.

영화로 보는 세상

현실정치에선 불가능한 ‘정직한 후보’

정치인에게 정직하길 기대하는 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길 바라는 것과 같을까? 정치행위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위로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드 ‘하우스 오브 카드’의 프랭크 언더우드가 소름 끼치게 실패했듯이 정치는 전쟁과 같아서 적의 목줄을 완전히 밟아 죽여야 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다. 다만 정치인의 덕목 중에서 가장 으뜸은 ‘정직’이라는 생각은 오랜 시간 변하지 않았다. (물론 선의의 거짓말이 왜 없겠는가? 작정하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 행해지는 불량한 거짓을 말한다)

3선인 국회의원 주상숙(라미란)은 우리가 뉴스에서 지겹도록 보는 이중적 정치인의 행각을 그대로 보여준다. 서민 코스프레는 기본이고 자신이 항상 정의의 편인 척한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어찌된 일인지 주상숙이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모든 일이 꼬인다. 생각해 보라. 정치인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면 이미 정치인으로서 주요한 기본 기능 하나가 망가진 거다. 그래서 영화 ‘정직한 후보’는 그 제목으로 이미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발칙한 상상력을 연출한 감독은 연극과 영화판(‘김종욱 찾기’, ‘부라더’ 등)에서 능수능란한 이야기 솜씨를 보여준 장유정 작가다. 여기에 ‘막돼먹은 영애

씨’에서 블랙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주며 한껏 몰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 라미란은 다른 배우와 대체 불가능해 보인다.

‘정직한 후보’는 한국 정치에서 가장 민망하고 낙후돼 있는 선거운동 전 과정을 꼼꼼하게 재현한다. 원곡의 감동을 무참하게 파괴하는 선거 로고송, 거리에서 오가는 시민들을 괜히 부끄럽게 하는 선거 운동원들의 칼로 켜듯 딱딱 맞는 칼군무,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구호들이 그것이다.

장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정치에 응어리진 마음 같은 게 있다. 삼류도 아닌 사류바닥에 지체되어 있으며 국민들이 촛불을

수없이 들었건만 정치는 여전히 미개하고 혐오스러운 뿐이다. 검찰청 입구 포토라인에서는 기쁨이 있는 얼굴로 자신만만해 하더니, 나올 때는 고개를 숙이며 국민께 죄송하다는 부조리극을 우린 지치지 않고 보고 있다.

조금 으스스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다. 조금 엉뚱한 상상을 해 본다. 주상숙 의원이 걸렸던 ‘정직 바이러스’가 지금 선거 후보자들에게 전염된다면 어떤 말들이 토론회에서 튀어나올까? 그리고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자 몇 명이나 될까? 춘곤증마저 상상을 부추긴다.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수소충전소

어느새.수소 어느새.넥쏘

Positive Energy NEXO



* 전국 수소충전소 '21년 180기, '22년 310기 구축 예정 (환경부 발표 기준)

아직 국내에 수소 충전소가 많지 않아서 관심을까 생각했는데
프랑스 에펠탑, 일본 도쿄타워 등 세계 중심지에도 충전소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곧 310개의 충전소가 더 생긴대요.
이거, 수소 에너지가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다는 증거겠죠?

-넥쏘 차주 김동현 님



■구입 문의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원콜 서비스 080-600-6000 ■17인치야복합 962km/kg(도심 99.5km/kg, 고속 92.6km/kg) [CO2배출량 0g/km] 공차중량 1820kg ■19인치야복합 937km/kg(도심 98.9km/kg, 고속 88.0km/kg) [CO2배출량 0g/km] 공차중량 1885kg ※연비 및 항속거리는 도로상황, 운전행위, 차량적재, 정비상태, 외기온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상태에 따라 완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항속거리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소 충전 시간은 수소충전소의 충전압력 및 외기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해 혜택 적용 후 판매 가격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기준 520만원 한도이며, 판매조건 및 선택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가격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차량의 외관 및 성능 개선이 나 관련 법규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델별 자비한 가격 및 시공은 해당 딜러의 가격표를 참고하십시오. ※상기 예약에는 기간 및 혜택은 당사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속주행을 합니다. ※한대지동차는 지정 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